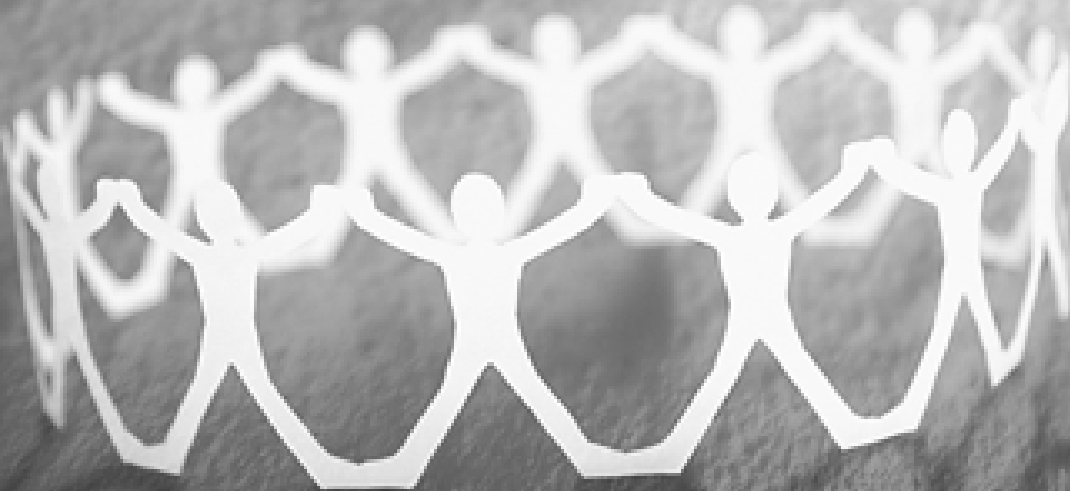


통일교육총서 12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 집필자 | 이 정 우 / 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 간 예 부 처

국민통일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원에서는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문제의식을 공유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통일교육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담은 '통일교육총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두번째로 발간되는 이 책자에서는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통일논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이론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자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I. 서론	11	VI. 테러리즘과 민주주의론	83
II. 힘의 논리와 남북관계	19	1. 테러리즘이론과 북한	
1. 세력균형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2. 민주주의론과 남북관계	
2. 세력우위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3. 남북관계의 현실	
3. 소 결		VII.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97
III. 탈냉전과 억지이론	29	1. 동맹이론과 남북관계	
1. 탈냉전에 대한 오해와 신보수주의의 등장		2. 패권이론으로 보는 미국	
2. 억지이론으로 본 북핵과 TMD 구축문제		3. 주한미군과 통일·반통일 문제	
3. 남북관계의 현실		4.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IV. 합리적 선택이론과 남북관계	51	VIII. 남북한 국력비교와 통일비용	117
1. 합리적 선택이론의 개념과 남북관계		1. 국력의 개념과 측정	
2. 공간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2. 남북한 국력비교와 대북지원	
3. 게임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3. 남북한 국력차이와 통일비용의 문제	
V. 기대효용이론과 남북관계의 전망	69	IX. 결 론	137
1. 기대효용이론의 개념과 결과의 예측		참고문헌	145
2. 기대효용이론으로 보는 북한체제의 미래			
3. 기대효용이론과 남북관계			

그림 · 표 목차

◆그림 목차

- 〈그림 1〉 고전적 억지이론의 구조
- 〈그림 2〉 국회의원 3인의 선호도, 전략에 따른 법안의 결과
- 〈그림 3〉 남북한 및 미국의 북핵해결 선호 1
- 〈그림 4〉 남북한 및 미국의 북핵해결 선호 2
- 〈그림 5〉 3인 행위자의 윈셋(Win Set) 모형
- 〈그림 6〉 ‘북핵’과 ‘북한체제 보존’의 이차원적 공간분석
- 〈그림 7〉 전개형 게임이론 모형
- 〈그림 8〉 북 - 미간 핵협상 게임
- 〈그림 9〉 확률로 보는 결과 가능성
- 〈그림10〉 김정일정권의 미래에 대한 각국의 입장
- 〈그림11〉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표 목차

- 〈표 1〉 북한정권의 미래에 대한 영향력 지수
- 〈표 2〉 각 학자별 국력 구성요소
- 〈표 3〉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 〈표 4〉 남북한 주요 산업능력 비교
- 〈표 5〉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I

서론

우리는 흔히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말을 한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전문학자들의 이론과 주장은 선뜻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 또는 주변의 경험과 관습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과거 남북한 관계 인식의 대부분은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경험과 그것의 간접적인 유포(교육, 선전, 구전 등) 및 계속되는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관계로 인해 경험적 실재가 이론을 지배·압도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즉 피부로 느끼는 긴장관계 속에서 남북한 통합 또는 통일에의 주장은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과 같은 특별한 사안이 있었던 특정시기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었다. 분단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힘을 키워 북한의 ‘무력야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집단적 강박이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6·15 공동선언’까지 이끌어 낸 남북한 관계의 화해 분위기는 북핵 위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사회인식의 변화를 단초하고 있다. 이제 남북한 관계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의 틀은 적잖은 변화에 놓이게 되었다.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인식은 미래에 대한 판단에 있어 혼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제’가 아닌 ‘이론’ 혹은 ‘전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이루어 왔다. 대부분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충돌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가끔씩은 화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새로운 남북한 관계가 모색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부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를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지부진함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다. 서로 상반되는 두 입장의 바탕에는 지난 남북관계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즉 빠른 관계진전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북한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쪽에서만 너무 ‘빠 주면서’ 구애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세계사적 흐름이 바뀐 지금, 과거의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어느 의견이 옳다거나

틀리다는 판단을 하기는 매우 힘들다. 단지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의견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은 미래가 해줄 뿐이다. 목소리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논리의 총화인 ‘이론’은 현실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반되는 주장이 사회 이슈가 되는 경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론이라는 것도 대부분 서로 상반되는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논리체계가 새로운 학설에 의해 바뀌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치열한 투쟁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천동설과 지동설,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논쟁의 세월이 소요되었는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체계의 총체적인 변화를 ‘토마스 쿤(Thomas Kuhn)’ 이후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¹⁾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남북한 관계를 이제 경험의 틀이 아닌 논리의 체계에서 바라볼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즉 우리는 지난날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과연 미래지향적 남북한 관계를 추진해야 할 현재 시점에서든 유효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토대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직감(直感)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또한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의 논리를 세워가기는 힘들다. 그런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관련 학자들이고, 그것을 일반과 연결시키는 것이 매체이다.

그런데 그동안 국내 매체의 정치적 종속성은, 매체의 성격이 진보적이든 혹은 보수적이든 자신의 이해와 부합하는 논리만을 선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일방적 사고만을 강요해온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현실의 변화를 보는 다양한 논리체계들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 스스로 우리의 현실(남북한 문제)을 ‘자신의 눈’으로 이해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1) 쿤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의 과학사는 서로 충돌하는 이론들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것이다. Thoma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또한 라카토스는 각 이론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이전의 이론을 논박하고 경험적 수를 늘리면서 검증된다고 말한다. I. Lakatos,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vol. 1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32.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어느 하나의 결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각의 이론들은 서로 다른 논리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다른 결론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각자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에 설 수 있다. 사실 서로 다른 논리로 여러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기도 하다. 동일한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두드러진 논리 중에 전쟁의 원인에 관한 이론이 있다. 대학에서 국제정치원론을 배울 경우, 가장 먼저 배우는 이론 중의 하나가 ‘세력균형 이론’이다. 이 이론은 우리의 상식과도 매우 부합하는 것이다. 즉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난다. 한국전쟁의 경우, 힘이 강한 북한이 힘이 약한 남한을 침공하였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더 힘이 강한 미국 등이 참전하여 북한을 물리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은 미국을 주둔시킴으로써 남북한 상호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힘의 균형은 남한이 유리한 방향에서 유지시켜야 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역시,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이 실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진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힘의 배분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세력우위(power preponderance) 이론’이라는 상반된 논리가 있다. 힘의 우위가 전쟁을 막는데 효율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힘의 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²⁾이 대표적이다. 힘의 전이이론은 전쟁발생국의 규정에 있어 세력균형이론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는데, 전쟁을 시작하는 쪽은 항상 기존의 세력관계에서 약자의 입장에 선 나라라는 것이다.

즉 기존 세력관계의 위계적(hierarchical) 질서 속에서 불만을 품은 상대적 약소국이 그 불만을 해소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

2) 힘의 전이이론은 옌스키(Organski)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확대된 이론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론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인류사에서 전쟁은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의 우위가 깨져 균형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이론은 A.F.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Knopf, 1968)를 통해 개념이 제기되고 A.F.K. Organski &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제2차 세계대전에 대입해 보면, 전쟁의 원인은 영국 등의 국가가 세력균형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이 당시 영국·프랑스 중심의 유럽질서 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된다.

세력균형 이론에서 보면 당시 영국이 보다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여 독일을 압박하는 것이 전쟁예방책이었다면, 힘의 전이이론에서는 독일에겐 부과된 과중한 패전책무를 탕감해주고 적절한 지위를 제공했다라면 전쟁이 방지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당신 스스로가 당시의 정책결정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전쟁을 막으려고 하였을 것인가? 스스로의 논리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또한 그것에 의해 전쟁을 방지했을 수도 또는 촉발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상반된 논리의 공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못하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우리가 직접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논리를 경시할 때보다 논리를 중심으로 (사실 논리와 이론의 대부분이 객관적인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현실을 인식할 경우,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대안의 수는 많아지게 된다. 자신의 경험 속에 갇혀서 다른 논리와 이론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는 것이다. 즉 이론과 논리는 경험의 수(數)를 늘리는 기능을 한다.

우리국민 모두가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나갈 때, 통일은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국제정세의 변동과 발전방향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 북한의 태도 하나하나에 따라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으로 변하는 개인의 대북인식 및 통일관은, 결국 국민의 의지가 아닌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들은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국민의식을 작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편승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똑똑한 국민이 똑똑한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정치적인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만, 반대로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똑똑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로의 논리를 가져야 한다. 정책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상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옳은 방식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나아가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여러 통계를 보면, 적지 않은 이들이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거나 급격한 통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통일과 북한문제는 무관심으로 돌려질 만큼 우리 삶에서 떨어져 있어 회피 가능한 명제가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의견을 논리의 토대 속에서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이라는 ‘무서운 조작’ 보다는 지속성을 가지는 스스로의 여러 논리들이 충돌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공동의 견해로 성숙되어 가는 사회적·국가적 풍토가 중요하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서 통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극단적으로 우리의 논리가 통일을 원치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흡수통일’ 이든 ‘낮은 단계 연방제’ 이든 ‘민족연합체’ 이든 부정되어야 하며, 통일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 국민들 의견의 총화가 통일이라면, 그 구체적 통일상(象)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속화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스스로의 통일논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론을 대비하여 풀어가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힘의 논리와 남북관계

1. 세력균형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2. 세력우위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3. 소 결

일반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상주의, 현실주의, 그리고 절충주의(혹은 제도주의)가 그것이다.³⁾ 단 어 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시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어느 학문에서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다소 작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나, 순수하게 바라보면 대체로 인정할 만한 분류이다. 어쨌든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힘의 논리는 현실주의 시각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 개념이다.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라는 걸출한 학자⁴⁾가 현실주의적 시각을 집대성한 이후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여러 학문적 시도들은 그에 동조하는 면이 많았다. 현실주의의 시각이 학문적으로 주요 흐름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힘(power)의 논리와 국제정치가 별도로 다를 게 없다는 역사적 인식에 기초한다. 즉 힘센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질서가 형성되듯, 국제사회 역시 힘이 강한 국가들의 세력관계 틀 속에서 모든 질서와 갈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적 세계질서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점령하였고 (1990년 8월 2일), 북한이 남한을(한국전쟁), 일본이 조선을 침략(임진왜란, 일제시기 등)한 역사적 사실들은 모든 다른 논리에 앞서 힘이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자신의 의지대로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힘의 배분(distribution of power)을 토대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데에는 사실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별로 없다.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여러 이상주의적 혹은 제도주의적 노력들 역시 힘의 배분에 따른 현실을 전면적으로 외면한다면 공허한 몸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인류 역사상 필연적으로 존재해 왔던 힘에 의한 질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주장은 일단 논외로 하고 현실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의 흐

3) 국제정치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분류는 김순규, 「신국제정치론」(서울 박영사, 1988), pp.35~47 및 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p.3~14 참조.

4) 그의 저서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Knopf, 1948)는 국제정치학에 현실주의의 전통을 세운 시초라고 평가된다.

름을 살펴보기로 하자.

흔히 인류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한다. 그만큼 갈등해결의 수단으로서 무력을 사용해 왔다는 말이다. 그런데 무력사용의 동인(動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단지 땅덩어리를 키우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것 또한 연구자 각각의 인식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다.⁵⁾ 여기에서 접근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방식들을 일일이 논할 필요는 없겠고, 단지 각국의 이해(interest)에 따라 상황은 전쟁으로 갈 수도 혹은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기도 하며 전쟁 없는 약간의 변동을 경험하는 상황을 유추해 보기로 한다.

1. 세력균형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당연한 말이지만, 힘이 세다고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굳이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외교라고 부른다. 이런 연유로 프로이센의 유명한 군사학자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무력사용이 아니더라도 위협, 강요, 보상, 교환 등의 방식을 통해 자국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굳이 전쟁을 감행할 국가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 이외에는 갈등해결의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이다. 예를 들어 1990년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대해 합병을 '권유'했다고 가정하고 쿠웨이트가 그것을 수용하였다면, 무력침공은 발생할 필요성을 잃는다. 그랬다면 중동의 역사는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여러 가지로 조건은 다르지만 일본의 조선합병은 강대국들의 묵인 하에 강압적 방식을 통해 공식적인 전쟁 없이 이루어졌다. 상대적·절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조선은 강대국들의 이해 배분의 한 과정에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일본에 합병된 것 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역사의 부산물로서 조선은 해방을 맞

이하고도 남북으로 갈리는 신세가 되어 현재까지 갈등의 역사를 안고 있다.

특히 양쪽은 서로가 국가로서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경험함으로써 상호간에 본능적인 전쟁공포감을 가진 채 공존해 왔다. 외교적·군사적 긴장이 생길 때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것은 비단 직접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만의 것이 아니다.

사회전체의 전쟁에 대한 공포감은 지난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 1994년 북핵 위기 등에서 우리에게 실감나게 닥쳐온 바 있다. 남북한의 이러한 갈등 상황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전쟁가능성과 연결해 보도록 하자. 남북한 간의 전쟁가능성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남북관계를 관통하는 파괴력이 가장 큰 이슈이다. 평화무드가 완연할 때 전쟁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뜬금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1994년과 2005년 같은 시점에서 '6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이 단순히 남북간 갈등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쟁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현실주의 시각 내에서도 힘의 배분에 따른 전쟁가능성을 관찰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주류를 이루는 전통적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반발한 세력우위(power preponderance) 이론이다.⁶⁾ 두 세계관은 같은 현실주의면서도 상반된다. 즉 세력균형이론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최고위(最高位)의 주권을 가진 개별국의 집합으로 인식되는데 반해, 세력우위이론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개별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적인 질서로 구성된다고 한다.

전자가 "모든 인간(국가)은 동등한 권리(또는 지위)를 가진다"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것을 비웃고 있는 셈이다.

6) 전쟁과 관련하여 세력균형이론을 대표하는 저서는 Hans J. Morgenthau의 op. cit.와 같은 책 1973년 개정판 ; Edward V. Gullick, *Europe's Classical Balance of Power* (New York: Norton, 1955) ;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A.: Addison-Wesley, 1979) 등이 있고 세력우위이론에서는 A.F.K. Organski, op. cit. ; A.F.K. Organski & Jacek Kugler, op. cit. ; Robert Keohane의 "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Regimes, 1967-1977," in Ole R. Holsti, Randolph Siverson and Alexander L. George, (eds.), *Changes in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Westview Press, 1980)과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George Modelski & Patrick Morgan, "Understanding Global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9 (1985) 등이 대표적이다.

5) John G.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 Bruce Bueno de Mesquita & David Lalman, *War and Reason*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2)

힘이 강한 국가가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상유지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상식적인 논리는 이런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국가가 주권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세력균형 이론가들에 따르면 세력균형은 평화를 가져오고 세력불균형은 전쟁을 부르며, 따라서 동맹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⁷⁾ 이에 대해 간단한 검증을 해 보기로 한다.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이 흐른 지금 남북한의 국력은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2003년 현재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은 6,061억 달러이고 북한은 184억 달러이다. 이는 2002년 4,770억 달러와 171억 달러 보다 격차가 더 커져 2002년에 남한이 북한대비 28배이던 것이 33배로 확대되었다. 1인당 GNI도 2002년 13.1배에서 2003년 15.5배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⁸⁾

국력을 단지 경제력의 차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총경제력은 국력과 비례관계를 가진다. 이에 따르면 남북관계에서 세력균형은 이미 깨어지고 엄청난 불균형상태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동맹의 차원에서도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굳건한 상황이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이 와해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세력균형이론의 가설은 남북한의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실이 이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남한의 국력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북한의 국력을 급격히 신장시켜야 균형이 이루어지고 또는 북한의 동맹이 남한 보다 훨씬 강화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비현실적 상황이 된다.

더욱이 세력균형은 균형자(balancer: 예를 들어 19세기의 영국이나 20세기의 미국)들의 이해에 따라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의 구조 속에서 남한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발전과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도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 냉전체제 하에서 남한을 후원하는 미국은 균형자로서 자국에 유리한 '균

형'을 만들기 위해 남한을 지원했고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이러한 지원이 남한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제 남한은 북한을 더 이상 겁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미 균형을 획득한 상황에서 남한과 미국의 진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주한미군의 성격논쟁과 결부되고 있는 것이 21세기 한미동맹의 현 상황이다.

세력균형의 논리상으로 볼 때, 균형자인 미국은 현상에 만족할 경우 남한 쪽으로 기울어진 '불균형'을 고려하여 남북문제 보다는 동북아 차원의 세력균형이라는 측면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된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현상의 변화(남북한 국력의 불균형)는 인정하되, 현재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으로부터 여러 보장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에 대한 균형자로서의 역할론은 점차 줄이면서 동북아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위해 변화의 과정에서 혼수와 경고를 하는 것이다.

2. 세력우위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이제 세력우위(power preponderance)의 시각에서 남북한 관계를 보도록 하자. 세력우위 이론가들은 세력균형은 전쟁을 초래하고 불균형이 오히려 평화를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동맹은 힘의 변화에 따라 가볍게 변화하기 보다는 이념적인 성향이 있어 오래 지속된다고 본다.⁹⁾ 이와 같은 현실주의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세력균형 이론과는 모순되는 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논리로 보면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던 남북한 사이의 질서가 남한에서 미국이 빠진 틈으로 힘의 전이(북한 및 그 동맹국의 힘이 남한 및 그 동맹국의 힘을 추월한 과정)가 생겨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상에 불만족하던 북한 및 소련과 중국이 남한에 대한 상대적 힘의 강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전쟁 자체만을 놓고 보면 힘이 강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그럴 듯하게 여어

7) 힘의 분포와 동맹관계 및 평화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Bruce Bueno de Mesquita, "The Contribution of Expected-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를 참조.

8) 통계수치는 국방부, 「국방백서 2004」, p.250을 참조.

9) Bruce Bueno de Mesquita, op. cit, 1989.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재차 남한이 북한을 힘으로써 압도하게 되는 과정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고조될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으로서는 북한을 공격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1980년 후반 이후 사회주의권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굳이 스스로 현상을 변경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흡수)통일에 대한 내부적인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도 이 시기였으므로, 더 이상 통일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는 국가의 절대목표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한으로서는 국력의 추월 과정에서 전쟁을 통한 현상변경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국제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라 외부환경이 오히려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세력우위이론의 축인 힘의 전이 논리를 수용한다고 해도, 남북한 간의 전쟁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의 조건에서 북한이 힘으로써 남한을 재추월하는 전이가 이루어 질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 또한 남한이 특별히 현재의 상황에 불만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력우위이론에서 전쟁 발생의 제2원인이 되는 것은 현상에 대한 불만족이다. 비록 힘의 전이는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만족의 강도가 커질수록 전쟁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선군정치와 같은 공격적 성향이 외부의 압박에 대해 오판(misperception)한다면 현상에 대한 불만족이 군사적인 표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이는 전이가 이루어져도 도전국(challenger)이 현상에 만족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반대의 경우로서 전이를 이룰 힘을 비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상 변경에 대한 불만족이 점증되어 전쟁을 일으키거나 회피하지 않는 경우이다. 1994년과 2005년과 같은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남한은 동맹(미국)과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힘의 전이이론의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해 남한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공세적으로 몰아 붙이는 것 보다는 현상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불만족도를 줄여 줌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는 핵무기라는 특수한 변수를 논외로 한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보다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어쨌든 세력우위 이론의 맥락에서 남한은 1990년대 이후 대북·통일정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만족을 취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한 것은 '퍼주기 논란' 등 비록 속 시원한 모습은 아니라는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우위이론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조치였음을 인정해야 할 대목이다.

3. 소 결

세력균형이론으로나 세력우위이론으로나 현재 한반도는 힘의 분포에 따른 전쟁가능성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력균형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힘의 우위에 있는 남한이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고 반대로 힘의 우위 차원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힘의 전이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에서 주변국의 이해와 남북한 당사자간 갈등의 소지는 도처에 내재하고 있다. 세력균형과 세력우위 어느 논리로 보더라도 현재는 변화의 과정이다. 과거 냉전의 틀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견고한 군사갈등의 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상황에서,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재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을 가진 국가는 현상변경에 대해 반발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경쟁국으로 보고 동북아에서 여러 전략적인 미래상을 그리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한반도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핵무기라는 매우 위험한 카드를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강경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전쟁을 피하면서도 향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 속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북아 질서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가가 한반도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세력균형의 시각에서 미국·중국 등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세력우위 시각에서는 북한에 불만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에서 남한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권은 그리 크지 않게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Ⅲ

탈냉전과 억지이론

1. 탈냉전에 대한 오해와 신보수주의의 등장
2. 억지이론으로 본 북핵과 TMD 구축문제
3. 남북관계의 현실

탈냉전(Post-Cold War)이라는 개념은 냉전(Cold War)이라는 단어에 대칭되어 만들어진 것으로서, 냉전은 미·소 양극체제하의 특수한 안보구조와 그에 따른 과도한 안보의 긴장상태를 통칭하는 말이고 탈냉전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한반도는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에서 소외된 냉전의 고도(孤島)라고 표현된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7년 이후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감돌면서 한반도에도 탈냉전의 의도가 조성되고 있다. 1994년 이래 남북관계의 발전적 단계를 가로막는 북핵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탈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1. 탈냉전에 대한 오해와 신보수주의의 등장

냉전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소련 중심의 양극체제(bipolar system)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다. 양극체제가 세력균형의 이원적 구조(dual structure)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냉전은 양극체제에 따른 경직된 질서의 이미지를 말한다. 즉 미국과 소련이라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양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세계가 ‘줄 서기’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한 채 전쟁(hot war) 아닌 전쟁(cold war)을 벌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련의 붕괴와 이에 따른 동유럽의 자본주의 편입으로 양극체제의 한 축이 사라짐으로써 양극체제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냉전 역시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과거 소련과 미국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의 옭가미에 묶인 채 여전히 긴장된 군사대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의 틀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과 같은 경제 개방을 추진하고 나름대로 세계화 추세에 동참하려는 상황에서 냉전의 틀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남북한 양자간에 아직 군사 전략상의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¹⁰⁾ 그런데 냉전종식, 이른바 탈냉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

10 역지의 차원에서 볼 때, 냉전이 해체된 이후 남북한 간 전쟁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련이 사라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자원과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Bruce Bueno de Mesquita,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tics* (Washington, D.C.: CQ Press, 2000), pp. 330-333, 476.

가집단 또는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두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는 소규모 국가분쟁이 미·소 냉전구조에 의해 통제되어 왔으나 탈냉전시대에 들어 지역분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탈냉전이 더 많은 분쟁을 만들어 냈다는 주장이다. 즉 과거에는 국제질서를 담당하는 주 행위자(main actors)인 미국과 소련이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ctors)로서 기존 질서를 유지·보완해 왔는데, 그러한 구조가 해체되면서 국제사회의 질서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유고, 체첸, 르완다 그리고 걸프전 등의 예는 탈냉전이 오히려 강대국들 이외의 국가들에게 군사적으로 더욱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과연 탈냉전은 인류에게 냉전에서의 안전보다 더 많은 불안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로 판명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는 탈냉전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인식은 실제의 통계와 다르며 또한 단순한 수치적 평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¹⁾ 이러한 오해들을 살펴봄으로써 냉전과 탈냉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탈냉전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갖는 것이 한반도 탈냉전의 지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과거 냉전의 구조 속에서 수직적으로(vertically) 형성된 질서가 냉전의 해체로 수평화(horizontalization) 됨으로써 수직적 질서에 대응한 과거의 전략과 현재의 변화된 수평적 구조 간에는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 즉 모든 국가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냉전의 낡은 전략은 그 효용이 떨어져 자못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만성적 위협’에 익숙한 이들은 전략의 수정에 앞서 현실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에게 세계적인 전략구조의 변화는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왔고 탈냉전 이후의 몇몇 현상들이 그들에게 오해를 갖도록 만들었다.

대표적인 몇몇 오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 이후 세계는 더 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냉전의 한 축이 무너짐으로써 각국 또는 테러집단들의 폭력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냉전 속의 1980년대와 탈냉전의 1990년대를 비교해 볼 때 별 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는 국제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의 분쟁이 한 번 있었고 이란-이라크전쟁, 그 외 6건의 국가 간 분쟁과 24건의 국내적 분쟁이 있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는 두 번의 체제위협 분쟁(걸프전쟁, 콩고전쟁), 그 외 7건과 28건의 국가 간, 국내적 분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가 1980년대에 비해 6건의 분쟁이 더 일어났지만 그것은 1년에 한번 꼴도 안 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가 더 많은 분쟁을 야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국내적 분쟁의 많은 부분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역사적·경제적 이유에서 일어났음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사회는 실패국가들의 관리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 여기에서 실패국가(failed states)란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구심점을 잃고 분열과 갈등을 계속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즉 구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주권의 상당부분을 안정화했던 정권들이 외부로부터 지원과 투자를 받지 못해 정치·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경우이다. 1990년대를 통틀어 이런 이유로 국내분쟁에 빠진 국가의 수는 36건이 된다. 그러나 미국(또는 국제사회)이 공식적으로 개입한 경우는 겨우 4건(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국내적 분쟁에 대해 간과하는 자세를 견지했음을 의미한다. 과거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이데올로기적 동질감을 앞세워 각 블록(bloc) 내에서 이루어진 교통정리는 이제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큰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의 분쟁은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된 것이다.

셋째,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세계경제가 단일시장화 되면서 국경을 무시한 다국적 기업, 범죄·마약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의 역할이 증대되어 결국 국가의 위치를 대신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탈냉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국제화와 지구촌 시대가 일상화되면서 논의된 주장이었으나 예측이 빗나간 아쉬움이 있다. 수치상으로도 국제 범죄집단에 의한 사고(테러)는 1980년대 연간 630건에서 1990년대 382건으로 40% 가량이나 줄어 들었으며, 그들의 활동이 줄어든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그들의 관심은

11)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미국 해군연구소(www.usmi.org)의 논점을 주로 참조하였다.

정권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일 뿐이다. (2001년 가공할 9.11테러를 일으킨 알 카에다(Al-Qaeda)의 경우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부분이 많으므로 VI장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다국적기업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세계가 움직이게 된다는 가정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임원의 대부분은 본사의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대치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의 영업은 본국 또는 해외본사에서 해당국가 회사법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여전히 국가의 틀을 벗어나 스스로의 독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

넷째, “중국은 과거 소련의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냉전의 틀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력의 신장에 따라 과거 소련이 존재하던 위치에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오해를 종종 한다. 그러나 소련을 중국으로 대체한 새로운 냉전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구소련과 현재의 중국은 세계질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제외하고는 서방세계와 마찰을 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자본투자가 필요하고 또한 미국과 같은 해외시장을 필요로 한다. 세계적 자본주의 구조에 깊게 발을 담그고 있는 중국이 모든 이익을 버리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맹주가 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대량파괴무기(WMD)의 급속한 확산,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미국)의 대처 불능,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의 증가 등이 탈냉전의 오해로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냉전의 시기에 비해 객관적으로 위험이 증가되었다는 아무런 경험적 자료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단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후속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그 확산이 염려되는 부분이다. 종합해 볼 때 탈냉전의 시대가 과거 냉전시기 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변화 그 자체보다는 냉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 기인한다.

한반도의 탈냉전에 있어서도 위의 평가는 대부분 적용된다. 탈냉전의 과정

에서 예견되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들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해소될 것이며 또한 일상화될 것이다.

2005년 현재 금강산관광이 일상화되고 개성공단의 확장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는 한반도에도 변화의 과정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아직 변화를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틀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탈냉전이 가져올 변화된 세상과 스스로의 인식 상에서 벌어지는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를 붙잡고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 스스로 변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탈냉전의 과실(果實)을 빨리 수확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탈냉전의 이러한 조류는 현재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강경한 외교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른바 네오콘으로 불리는 신보수주의(Neo Conservatism)기치를 내건 부시행정부는 1차 집권을 거쳐 2차 집권기간에도 강경한 외교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1980년대 레이건행정부 시절에 태동한 신보수주의는 과거 보수주의에 비해 훨씬 강화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전통적 보수주의가 ‘작은 국가’를 강조한 것에 반해 레이건시대의 신보수주의는 정부간섭을 최소화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에서 도덕적 가치가 침해될 경우 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²⁾ 대외정책에 있어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고 군비증강과 전략방위구상(SDI)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듯이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는 보다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였다. 9.11테러를 통해 미국은 더 이상 주저할 필요 없이 자신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즉 테러리스트들과 강패국가(rogue states)들에게 군사적 우월성을 통해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공격을 가하는 전략이 주도적인 외교전략이 된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이 바라는 세상은 첫째, 미국적 평화(Pax Americana), 즉 미국 중심의 단일 국제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전국의 등장을 저지하

12) 김성환, “신보수주의자들의 세계관과 전략,” 『통일한국』 (2003년 9월호).

려고 한다. 이들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경쟁국으로 상정하고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미국외교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신보수주의자들은 강대국가가 테러집단과 공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이들은 다자간비확산체제(핵확산금지조약; NPT, 또는 생물무기금지협정; BWC, 과 같은 국제군비통제)에 의존하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자적 군비통제보다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핵전략 우위'를 지속하는 것이 강대국가와 테러집단의 핵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민주화 도미노이론'에 따라 중동지역을 민주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라크에서 실천하고 있다.¹³⁾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을 민주주의국가로 변모시킨 경험이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를 실행할 수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수단이 다름 아니라 압도적인 군사력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3.5%에서 3.8%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군사부문혁신(RMA)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문제는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신보수주의 경향이 동북아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동맹관계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중이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또는 핵보유)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부시행 정부는 1기와 2기에 걸쳐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명찰을 달아줌으로써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1994년 전쟁 가능성의 공포를 실감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남북한의 화해무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국제 안보전략은 전세

계적으로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이 위협의 근원지로 북한을 지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이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게 되었다.

2. 억지이론으로 본 북핵과 TMD 구축문제

핵무기의 등장 이후 국제안보 연구는 거의 핵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이론이 바로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으로 말미암아 실제 전쟁에서 그것이 사용되기보다는 전쟁을 억지하는 기능으로 전환된 것이다. 즉 핵무기의 위력을 토대로 보복을 공언함으로써 잠재적 침략국의 선제공격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억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복의 능력과 보복의지의 확실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그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약소국의 경우, 강대국에 비해 억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핵무기 개발의 유혹은(핵확산문제를 별개로 할 경우) 억지를 실현하기 위해 택하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따를 때 북한의 핵개발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억지의 유형은 위협의 대상이 자국이나 아니면 동맹국이나에 따라, 그리고 실제적 위협이나 아니면 잠재적인 위협이나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는 전략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 안보위협이 아닌 확대된 긴박한 억지(extended-immediate deterrence)가 되며, 북한미사일에 의한 미국안보의 위협은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억지(direct-general deterrence)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의 실체와 미사일기술의 수준으로 볼 때, 사실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시행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직접적이고 긴박한 억지(direct-immediate deterrence)의 대상이라고 '엄살'을 떠는 상황이다.¹⁵⁾

13) 예를 들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국가세우기(State Building)」라는 신작을 통해 노골적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를 새로운 국가로 만드는 과정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4) 김성한 op. cit.

15) 억지의 유형에 대해서는 Paul K. Hut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참조.

역지의 기본원리는 위협(보복)을 통한 적대적 국가간의 전쟁방지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 시스템의 구축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써 역지의 틀을 넘어서는 강제(compulsion)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부터 역지를 받지 않고 자신만이 상대를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역지의 개념은 핵무기와 냉전의 산물로서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containment policy)이 소련의 꺾목할만한 핵 개발로 실효성을 잃자 대두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유일무이의 초강대국으로 존재하는 미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2차 공격능력, 유연반응전략, (제한적) 선제불사용전략,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상호확실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등과 같은 용어들은 모두 핵무기, 억지전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현재 미국이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의 이른바 강대국들에게 대해 취한 태도는 억지의 차원을 넘어 거의 강제의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억지라는 용어는 잠재적인 침략국과 방어국 사이에 거의 대등한 능력과 신뢰도를 보유하고 또한 현상을 유지(maintaining status quo)하려는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미국에게 있어 '직접적 억지'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핵개발은 미국(또한 남한)에 대한 억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미국에게 있어 북한은 강대국가로서 교정되어야 할 강제의 대상일 뿐이다. 미국이 그토록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실제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한 도시를 겨냥하여 공격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결과는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국제갈등·전쟁 분야에서 명망 있는 쿠글러(Jacek Kugler)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한 필자와의 대담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미국을 공격한다면, 남한은 섬(島)이 될 것이다.(미국의 용단폭격으로 북한 땅이 바다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라는 비유로 그 가능성이 희박함을 명확히 하였다. 아무리 무모한 ‘깡패’라 하더라도, 자신의 파멸을 전제로 아무런 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 공격행위를 하

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미이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본토공격 가능성을 운운하며 엄살을 부리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군사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주기적으로 확대 선전하고 있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안보 구조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게 새로운 안보전략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현재의 우월한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레이건정부 시절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던 전략방위구상(SDI)을 통해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우월한 억지력을 갖고자 하던 미국이, ‘미래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억지가 아닌 강제의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중이다.

억지전략은 기본적으로 세력균형이론의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는 무정부적이며, 상호 대등한 힘의 견제 속에서 안정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힘의 균형을 깨고 우월한 지위로 가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상호확실편괴(MAD)의 상황(미국과 구소련이 핵전쟁을 할 경우, 승자 없이 모두 엄청난 피해를 보는 상황)을 혼자만의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상황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안보구조가 이렇게 변모할 경우, 모든 국가는 미국의 편에 줄을 서든지 아니면 가공할 보복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불리한 대립구조에 서야 한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이다.

고전적 역지이론에 따르면 상호확실과괴의 상황에서 일방적인 대량보복의 상황으로 구조가 변경되는 과정에는 불안정한 위기가 닥친다. 이런 논리에서 중국·러시아를 무시하고 미국이 최근의 행보를 계속할 경우, 갈등의 수위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외형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잠시 주춤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이 본격화될 경우,¹⁶⁾

16) 부시 미 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미 국방대학교 연설을 통해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미·소간에 1972년 맺은 탄도포로교환기밀합의(ABM제한조약)를 2003년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의 MD체제 실현은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¹⁷⁾

억지라는 것이 신뢰관계가 없는 국가 간에 생성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국 등이 전통적인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의 MD 구축에 손을 들어 준 것은 별로 특이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남한은 매우 복잡한 입장에 처해 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한으로서는 북·미 갈등의 불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 갈등의 애꿎은 희생물이 될 수 있는 남한(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도)은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북한 핵에 대해 억지력을 행사하고자 핵개발을 시작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적극 동조하여 전역(戰域) 미사일 방어망(TMD)에 동참하는 것도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이 강경기류를 타면서 지금 남한은 여러 가지로 외교적 선택권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남한은 미국의 전략에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남한 안보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 TMD 구축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또한 막대한 요격시스템 구입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아직까지 요격미사일체제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확실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¹⁸⁾

남한으로서는 미국의 강경한 안보전략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별로 없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을 맞게 되고 또한 동북아의 안보 긴장상태도 '6월 위기설'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노출된다.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

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조속히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핵문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미국의 MD 구축이 본격화되면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이 거세져 동북아는 기약없는 군비경쟁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핵문제의 호전과 남북한 상호간에 괄목할 만한 평화적 진전이 없는 한 남한의 미국 눈치보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의 자주적 안보옵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그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¹⁹⁾ 미국의 미사일방어 역사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련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선제공격에 취약성을 느낀 존슨행정부는 'ABM 파수병체제'라는 방어망을 공표하였고, 이는 이후 닉슨행정부 들어 '호위체제'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미국과 소련은 이 시기에 군비경쟁의 과잉을 막기 위해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조약)을 체결하게 된다(1972년). 핵무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각각의 이기적 행위가 재정적·안보적으로 그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10여년 동안 양국은 엄격한 제한 속에 최소한의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레이건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협정은 전면적으로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소위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략방위 구상(SDI)이 주창되었기 때문이다(1983년).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아닌 소련이나 기타 적대국에 대해 한정된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억지대상으로 삼는 핵무기는 동맹국의 핵무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동맹국의 핵능력을 유지한 채, 상대방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에게 있어 최초로 핵무기가 개발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반발이 일어나고 새로운 단계의 군비경쟁이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게 행운이었던 것은 경제력이 쇠퇴해가던 소련이 군비경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수

17) 단순한 핵무기 수에서 볼 때 러시아는 미국의 10,000여개 보다 많은 17,000여개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410개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다. www.iass.org

18) 2004년 3월 26일 미국의 퇴역장성 49명은 'MD가 실용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무모한 곳에 돈을 들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MD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다시 불붙은 MD구축, 부시 뜻대로 될까, www.ohmynews.com 2004년 4월 2일.

19) 미사일방어의 역사에 대해서는 로버트 D. 블랙월·알버트 카너세일 위임, 김일수·이정우(역),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서울: 한울, 1997), pp.33~62.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의 미사일위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군사력이 아닌 외교적인 측면에서 방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당시 미국의 SDI가 소련의 경제력을 더욱 악화시켜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궤변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일 뿐이다. 만일 소련이 냉전체제를 강화하는 '막가늌' 정책을 택했다면 지금의 세상은 과도한 핵무기와 과도한 방어망으로 휩싸여 있을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창을 막는 방패'와 '방패를 뚫는 창'의 모순(矛盾)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것이다.

소련의 붕괴로 SDI는 전 부시행정부에 의해 전지구적방어(GPALS)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SDI의 원대한 계획에서 약간 후퇴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정된 것이다. 그런데 1991년 1차 걸프전쟁이 일어났고, 생중계를 통해 패트리엇 미사일의 요격능력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그러나 공식적 요격율이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임은 이후에 드러나고 만다. 어쨌든 미국은 요격미사일에 대한 확산된 선호를 바탕으로 깡패국가(rogue states, 당시에는 pariah states 부랑국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들의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는 동시에 요격시스템의 기술적 효율성을 '허위광고' 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1992년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역미사일방어(TMD)로 규모가 축소되는 듯 하였으나, 1994년 이래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압력으로 국가미사일방어(NMD)가 추가되어 'TMD+NMD'의 이중적 방어계획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그간 3차에 걸친 요격실험이 기술적으로 그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집권한 공화당은 현 부시대통령의 입을 통해 기어코 새로운 미사일방어계획(MD)을 공표하고야 말았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으나, 1967년 이래 지속된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은 그 명칭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자국과 동맹국들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실제적·잠재적 적대국과의 안보상황에 따라 약간의 전략적 수정이 있었을 뿐 그 원리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상대의 핵무기는 무력화하고 자신의 핵무기는 여전히 상대를 위협하겠

다는 이기적인 논리이다. 왜냐하면 안보적으로 불리해지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기조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전력강화를 뒤쫓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사일방어는 군비통제와 군축의 개념과는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의 논리에는 상대를 도덕적으로 폄하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과거 냉전시기에 미국은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최근에는 북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을 '깡패국가'로 만든 바 있다. 중동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은 핵보유가 거의 확실함에도 동맹국이기 때문에 '깡패'가 아닌 보호의 대상이다. 이 점에서 우리(남한)는 미국의 동맹국인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많은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고육책인가? 미사일방어는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최소 6백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미사일방어망이 '돈값'을 할 것인가? (사실 이 보다 몇 배가 들어갈 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할 경우 남한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가? 이로 인해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동북아 미사일방어망이 '돈값'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방어망을 통해 얻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돈을 들인 만큼 이익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러시아 등과 긴장이 고조되어 특히 동맹국인 남한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게 되면 또한 그것을 기술적으로 뚫는 무기가 개발될 것이 분명하다.²⁰⁾

고전적 억지이론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의 논리를 알아보도록 한다. 억지이론의 핵심인 '공포의 균형' 상태는 상호 확실 파괴(MAD)로 진화되면서 더욱 공포스러운 균형을 만들어 왔다. 즉 핵전쟁국

20) 앞의 각주 18을 참조.

간의 보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일단 핵전쟁이 일어나면 양국의 인구가 대부분 사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1>에서 사선이 그어진 부분은 안정된 억지상태를 의미하며, 그 외의 부분은 불안정한 억지상태를 나타낸다. MAD(1의 상황)에서 일방의 '대량보복' 상황(2 또는 3의 상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 전쟁의 가능성은 고조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두 개의 안정된 억지상황 사이에는 불안정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억지상황이 '세력균형'의 상황에서 '대량보복' 상황을 거쳐 '공포의 균형' 그리고 MAD 상황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번에는 핵무기 감축이 아닌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미국이 MAD 상황에서 '대량보복'의 상황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이 역시 안정된 억지의 상황이나 불안정한 단계를 거쳐야 하며 또한 미국의 유일한 핵지위는 상대를 자극하여 또다시 MAD의 상황으로 이전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그 사이에 또다시 불안정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상적 국간의 안보게임은 제로섬의 성격을 띠게되며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돌입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은 현재 과거의 미사일경쟁과는 달리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있어서 기술·재정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다. 또한 현재의 패권적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하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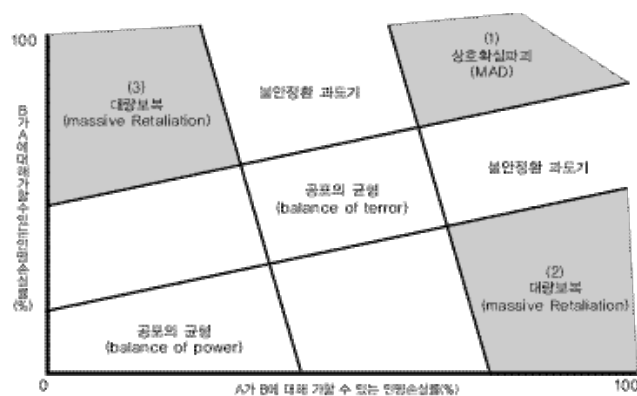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경쟁국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패권도전국인 중국이다. 경제성장률에 따른 국력측정 전망을 보면 2010~2020년 사이에 중국은 미국의 국력을 추월(over-taking)할 것으로 예상된다.²²⁾ 힘의 전이이론 등에 의하면 이 시기에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된다.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방어국인 미국이 자연스럽게 패권적 지위를 양보하고 도전국(중국)이 이를 계승하면 된다. 이 경우 양자는 현존하는 세계 질서에 대해 서로 만족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가진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 큰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현재 자신들이 보유한 패권적 지위를 놓치고 싶지도 않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미국을 A로 중국을 B로 볼 때, 현재 양국간에 처해 있는 2의 상황을 보다 공고히 하여 1의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또한 이러한 군사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의 추월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 미국이 양차대전을 통해 영국의 패권을 자연스럽게 양도받은 것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헌팅턴의 말대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힘의 전이이론은 방어국(기존의 패권국)이 도전국에 대해 대량보복의 능력을 가질 때(2의 상황)가 같은 대량보복의 상황(3의 상황)이라도 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해 2의 상황을 유지시킴으로써 다가올 미래의 미·중간 추월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사전에 획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 추진과정에서 남한이 받을 영향 및 남북관계의 충격이다.

위의 논리에 따라 미국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미사일 방어망의 추진을

〈그림 1〉 고전적 억지이론의 구조



21) 패권전쟁이론과 장주기이론에 따르면 각국의 국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침이 생기고 따라서 패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패권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국은 현상유지가 도전을 통해 생기는 이 익보다 작다고 생각할 때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Robert Gilpin, "The Theory of Hegemonic War," in Robert I. Rotberg & Theodore K. Rabb (eds.),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Ch. 2; George Modelski & William R. Thompson, "Long Cycles and Global War," in Manus I. Midlarsky (ed.), op. cit.

22) Jaek Kugler & A.F.K. Organski, "The Power Transition: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valuation," in Manus I. Midlarsky (ed.), op. cit. 특히 <figure3>에서는 힘의 전이와 억지의 상관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다.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 과거의 관성에 따라 미국의 입장에 전면적으로 동조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는 대립각을 쌓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동북아에서는 제2의 냉전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남한과 일본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동북아 TMD를 구축할 경우, 러시아·중국·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창과 방패의 긴장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남한이 미국의 정책에 반하여 미사일방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 기는 힘든 입장이다. 그동안의 관계와 미래의 안보에 있어 미국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이다. 일부에서의 적극적인 반(反)미사일방어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주장하지만 마땅한 ‘능동적’ 조치가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능동적 조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필자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겨우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뿐이다. 동북아 TMD에서 남한만 왕따가 될 수도 없고, 또한 재정분담 없이 무임승차(free riding)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북핵문제라는 시급한 당면과제 때문에 계획이 약간 지연되고는 있지만, 미국 국내정치에서 강경파가 집권을 계속하고 이라크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면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북아 TMD계획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어차피 목표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중·러의 ‘미움’을 덜 받고 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TMD에 대해 마땅찮은 모습을 가끔씩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반대 의사 표명과 함께 남북 당국자간 관계진전을 통해 우리의 미사일취약성을 객관적으로 적게 만드는 것이 동북아 TMD 구축에 있어서 재정분담의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다. 현재의 진행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강요된 게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협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가장 약소국인 남북한은 무대중심에서 있으면서도 조연일 수밖에 없다.

3. 남북관계의 현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말미암아 남한은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과 함께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북·미 등의 불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 갈등의 애꿎은 희생물이 될 수 있는 남한은 근 10년 동안 곤경에 처해 있다.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이 강경기류를 타면서 지금 남한은 이에 대응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남한으로서는 미국의 강경한 안보전략으로 이익 보다는 손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 신뢰회복 노력도 미국의 강경전략으로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또한 동북아의 안보 긴장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제2의 전쟁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조속히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변국 특히 동맹국과의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이 점에서 동북아 주요 동맹관계인 미일동맹이 상호간에 강경기류를 기정사실화해 가는 과정에서 남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공동전선은 양국에게는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몰라도 동북아 전체적으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이 1972년 소련과 맺은 요격미사일협정(ABM)을 부정하면서까지 우월한 ‘억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 미국에게 있어 미래 확실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일방적 억지’를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적·외교적 노력의 절반만 투자해도 현존하는 세계의 안보문제는 더욱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을는지 모를 일이다. 기본적으로 억지이론의 인식 속에서는 ‘안정된 평화(stable peace)’를 오랫동안 도모하기 힘들다.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보여지는 미국의 행보는 중국·러시아 및 기타 약소 불만국가들의 반작용으로 이어져 군비경쟁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

이 농후하다. 특히 미국이 현재의 강경노선을 고수할 경우, 남북한 상호간에 팔목할 만한 평화적 진전이 없는 한 남한의 미국 ‘눈치보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한의 엉거주춤한 자세는 또한 상황에 따라 남남갈등으로 비화되어 내부역량을 떨어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자주적 안보옵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관계의 개선은 그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04년 6월, 설악산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최초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사건이다. 특히 어떤 사고가 있어 그에 따른 임시적·미봉적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서해안에서 남북 해군간의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전향적으로 상호비방 중단을 합의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즉 남북 쌍방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함으로써 향후 남북 군사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긍정적 사례를 만들었다.²³⁾ 남북 군사당국은 전체회의의 두 차례와 실무대표접촉 다섯 회를 진행함으로써 서로가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하면 소정의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원래 국가간의 외교행위 중에서 가장 합의를 이루기가 힘든 것이 군사 분야이다. 따라서 남북한과 같이 전쟁의 경험이 있고 반세기가 넘도록 침예한 군사대립을 해온 두 ‘국가’가 군사적 합의를 이룬 것은 높이 평가할 사안이다. 안보를 위해서는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합의와 같이 신뢰구축을 통해 상호간에 위협을 낮추는 소프트웨어적인 두 가지 측면의 진전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동안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만 안보에 매진해오던 남북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서로 간에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핵문제를 제외하면 한반도문제는 점점 한반도화 되어가고 있다. 물론 주변국의 이해가 적지 않지만, 직접적인 안보위협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지 않는 한 변화의 주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짐 지워졌다. 즉 동북아체제 자체에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남북한의 내부적

갈등은 외부의 조정을 받기보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결국 남북한 상호간에 군사적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동북아 냉전을 넘어 탈냉전으로 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23) 편집실, “장성급회담 합의내용과 해설,” 『통일한국』 (2004년 7월호).

IV

합리적 선택이론과 남북관계

1. 합리적 선택이론의 개념과 남북관계
2. 공간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3. 게임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제정치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체를 속에서 그 구성원의 행위를 이해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 사회와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단위는 개인(individual)이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행위가 확대되어 사회가 되고 구조화되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제도와 구조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우리들은 기존의 제도와 규범을 익히면서 사회화되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중세의 구조와 현대의 구조는 왜 판이하게 다른가? 기존의 규범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전래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개입하여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일까?

마르크시즘에서는 역사의 변동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구조에서 찾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의 예를 들면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모순적 갈등구조가 상호간의 마찰을 빚어 충돌하고 그 결과 타협 또는 혁명을 통해 개선되거나 체제적인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서구의 근대화이론가들은 경제적 발전을 통해 사회구조의 변동이 일고 자연적으로 새로운 의식과 질서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중복되는 말이지만 민주주의론자들은 인류의 역사가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발전되어왔고,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른 결실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사회구조로 변모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의 변화와 구조의 변동은 도대체 어떤 경로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까? 한반도가 일본제국주의에 합병되고, 해방이 되고, 미·소의 합의로 분단이 되고, 또한 전쟁을 겪고 휴전이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각각의 상황으로 전화(轉化)하는 동력이 되었던 것인가? 우리들은 역사공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배경과 원인 그리고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남북한 분단구조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원인을 가지고 통일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북한의 경제위기와 남한의 적극적인 포용정책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변화용인이 그것을 결과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수많은 결정의 구조 속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이 다른 이론에 비해 차별성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분석의 가장 중요한 단위로서 개별 행위자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이론이 체제와 이데올로기 또는 구조와 같은

거대 담론의 틀 속에서 개인의 의지와 욕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해, 이 이론은 개인들의 욕구와 의지가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투영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합리적 선택이론의 개념과 남북관계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처음 접할 때 가장 혼란스러웠음은 '합리성(rationality)'에 대한 개념 파악이다.

이 문제는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생기는 혼란이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이다.²⁴⁾ 흔히 '합리성'이라는 용어는 '사려 깊다', '신중하다', '정상적이다'라는 용어와 혼용되는데, 이론에서 사용되는 합리성은 자신의 선호(選好, preference)에 대해 지속적이고 호환성을 가진 채 그것을 자신의 복리(welfare 또는 gain)에 기여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스스로가 선호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에 맞춰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제정치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전체의 틀 속에서 그 구성원의 행위를 이해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 사회와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단위는 개인(individual)이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행위가 확대되어 사회가 되고 구조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론의 시각이다. 즉 어떤 사회의 변화나 현상(status quo)의 변화는 체제차원 또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변화되어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개인들의 선호가 상호 작용하여 체제나 현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논리이다.

미래 예측적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각 개인(꼭 개별인간이 아닌 개별적 행위자)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문제 또는 상황의 해결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학적 또는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도달한 결론이 꼭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합리적

24) 국내에서는 개념상의 혼동 때문에 '합목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관계」(서울: 한울, 1995)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이론에서 사용하는 '합리성'에 대한 정의와 그 활용에 대해서는 George Tsebelis, *Nested Gam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p.1~17; James D. Morrow, *Game Theory for Political Scientis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7~8. 게임이론에 대한 수치적·기술적 접근을 위해선 Ken Binmore, *Fun and Games* (Lexington: Heath and Company, 1992)가 유용하다.

선택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의 정확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결론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유추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계기를 준다는 점이다.

사실 이렇게 딱딱한 개념정의는 이해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알아보기로 한다. 어떤 사람이 딸기아이스크림(S)을 바닐라아이스크림(V)보다 좋아하고 또한 바닐라아이스크림을 초코아이스크림(C)보다 좋아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선호는 $S \succ V \succ C$ 로 기호화될 수 있다. 또한 호환성(transitivity)에 의해 $S \succ C$ 가 된다. 만약 $S \succ V$ 이고 $V \succ C$ 인 사람이 $C \succ S$ 의 선호를 가진다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 $S \succ V$ ' 이고 ' $V \succ C$ ' 이면 ' $S \succ C$ ' ➡ 합리적
' $S \succ V$ ' 이고 ' $V \succ C$ ' 이면 ' $C \succ S$ ' ➡ 비합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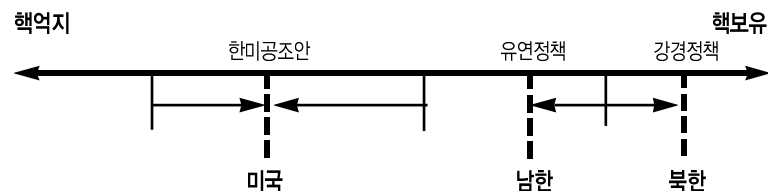
이러한 호환성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약속이다. 남북관계의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북핵문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① 전쟁을 통한 북핵 저지, ② 북핵 보유해도 전쟁 반대, ③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 저지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③>①이고 ①>②이면 ③>②가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적용되는 규칙이다. 같은 선호 속에서 ②>③의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게임이론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이와 같은 선호도의 호환성은 불변의 규칙이다.

그런데 인간의 선호는 각기 다르고 어떤 때는 모호하기 때문에 그 선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이론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이 이 이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테니스선수가 경기를 할 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이 제각각의 개인이 정해진 규칙 하에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 마치 운동선수처럼 행동하는 상황이 분석의 대상이다.

서양 사람들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이해를 위해 포커게임의 예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화투놀이인 고스톱을 통해 합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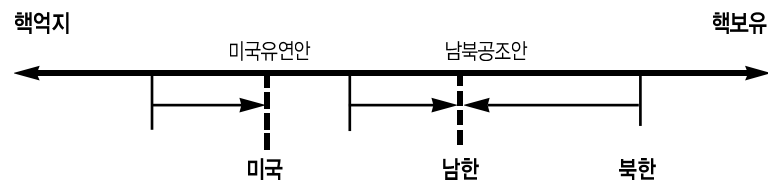
의원 2가 더욱 극단적인 주장을 하였더라도 세 의원의 선호 구도 상 그것은 결과(법안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주어진 절차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규칙 하에서 각 의원의 ‘합리적 행위’는 타협을 통해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합리적 행위란 의원3이 두 개의 선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가까운 법안1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여당 의원1은 정권경쟁관계에 있는 의원2를 소외시키기 위해 자신의 선호를 다소 이동시킴으로써 의원3과의 타협을 이끈 것이다. 결국 타협의 결과, 각 의원의 원래 선호도와는 다른 법안1이 최종적으로 산출되고 결과에 대한 ‘만족’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이는 새로운 선택의 순간에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림 3〉 남북한 및 미국의 북핵해결 선호 1



국회위원의 법안결정과정을 복핵문제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가능하다. <그림 3>은 북한이 핵보유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막으려고 하며 또한 남한은 중간지점에서 미국과 공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한 모델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유연정책을 펼치든 강경정책을 펼치든 남한과 미국이 공조를 하는 한 상호간에 합의점은 없다. 따라서 핵억지를 추구하는 미국과 북한사이에는 서로 다

〈그림 4〉 남북한 및 미국의 북핵해결 선호 2



른 지향으로 갈등만 심화될 뿐 타협은 불가능하다.

〈그림 4〉는 남북공조에 따라 북한의 정책이 대폭적으로 남한의 선호에 가까워진 경우이다. 미국 또한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남한의 선호 쪽으로 위치를 변동한 경우이다. 전체적으로 남북한과 미국의 3국 관계는 매우 유연해졌다. 그러나 각국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선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연안’과 ‘남북공조안’ 간에는 여전히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만족도를 떠나 합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남한이 ‘남북공조안’을 선택하든 ‘미국 유연안(하미 공조안)’을 선택하든 상황에는 변동이 없다.

위의 경우와 같은 일차원적 합리적 선택은 이해(interest)관계의 변수가 많
아지고 참가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거부
권자(veto players)가 등장하고, 각 참가자의 힘(power)과 관심도(salience)
가 다르게 작용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에 ‘힘의 논리’가 가세되고, 경우에 따
라 타협은 불가능하게 된다. 즉 정상적인 타협의 영역(예를 들어 <그림 2>에
서 의원 3과 의원1의 사이)은 존재하지만 결과는 현상(status quo)을 벗어나
지 못하고 대부분의 참가자가 불만족(dissatisfied)하는 결과가 지속될 수 있다.

냉전 시기의 남북한 관계는 양자(남북한) 혹은 다자(남북한 + 미·소 등의 주변 강대국)의 거부권자가 자신의 선호(위치)를 고집함으로써 현상변경의 어떠한 시도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탈냉전의 세계사적 변화로 핵심적 거부권자인 남북한이 다소 유연해지면서 어떤 타협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여년 넘게 지속되는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과 북한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거부권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여전히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만약 어떤 변화의 흐름이 발생한다면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측에 따른 남북한 관계의 변화방향은 현재의 북한당국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예측이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를 주저하고 여전히 거부권자로서의 위치를 고집하게 만들고 있다. 자신의 선호와 다른 결과가 예측될 때, 그 참가자가 택할 수 있는 방안이란 협력보다는 본인의 선호를 보다 확실히 보이는 것이다. <그림 2>의 의원 2를 북한당국에 대입하여 선호를 보다 확실히 보이는 것이다. <그림 2>의 의원 2를 북한당국에 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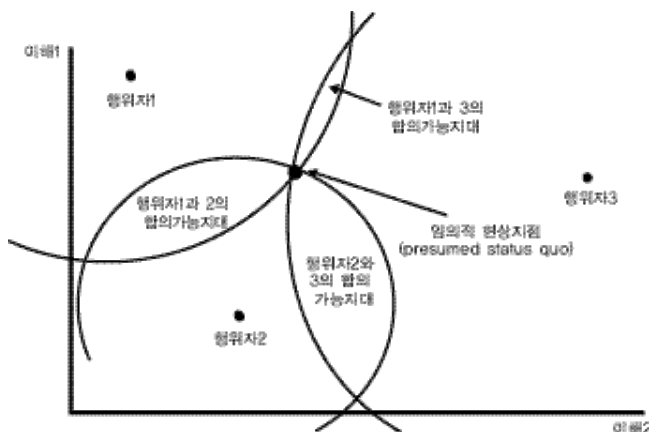
하여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자신의 목적과 선호에 대해 지극히 '합리적'인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남북한 관계에서는 정해진 규칙이 거의 없다. 하나의 제도 내에서 합의 또는 타협의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신을 가진 거부권자들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주어진 회기(會期)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도 없고, 더욱이 서로 다른 선호와 힘을 가진 주변 열강들이 참가자로 개입하기 때문에 간단한 예측을 하기 힘들다. 북한의 소극적 변화에 대해 감정적 비난을 하기에 앞서, 그들이 가진 선호와 체제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의 기대치가 수정되고 전략도 바뀔 필요가 있다.

1절에서 살펴 본 일차원적인 분석은 현실상황에서는 별로 활용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핵개발과 핵억지의 두 가지만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또는 체제보장이라는 또 다른 이해(interest)관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서로 다른 이해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일차원적인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다. 상황의 종결(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된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함께 미국 등의 경제지원 및 체제보장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림 5〉 3인 행위자의 윈셋(Win Set)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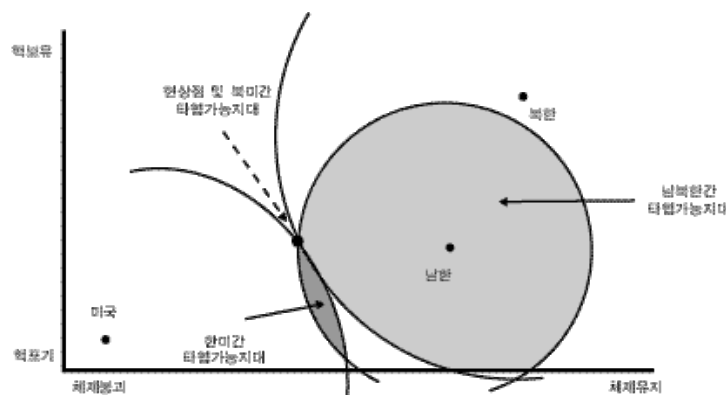


이 상황을 합리적 선택이론의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핵개발’과 ‘북한체제의 보장’과 관련된 두 개의 이해 측면에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몇 명의 행위자(여기서는 국가의 수)가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즉 문제가 되는 이해의 수와 참여자의 수에 따라 분석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5〉에서 3명의 행위자는 이해1과 이해2라는 두 가지 사안에서 자신의 선호를 조합한 선호점(point of preference)을 가진다. 그러나 현상은 그 두 개의 선호와도 합치하지 않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에서 각 행위자는 자신의 선호점에서 현상점(point of status quo)의 간격과 동일한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현상과 자신의 선호간격 사이에서 다른 행위자와 중첩되는 부분에서 각 행위자는 타협점을 찾게 된다. 즉 자신의 선호점과 가까울수록 타협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각 행위자가 동등한 힘(투표에서 1인1표제와 같은 경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타협을 시도하는 양자는 〈그림 5〉와 같이 3명의 행위자가 존재할 경우, 행위자 1과 행위자 2 또는 행위자2와 행위자3의 타협가능성이 행위자1과 행위자3과의 타협가능성 보다 높다. 따라서 행위자3과 행위자1은 이러한 조건에서 서로 간에 타협하기 보다는 행위자2와의 타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해의 수가 많을수록 필요한 공간적 사고를 복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를 들어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6〉에서 남북한과 미국은 ‘핵확산’ 및 ‘북한체제보존’이라는 두 가지의 이해사안에서 각각 서로 다른 선호점을 가지고 있다. 한미간에는 타협가능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 오히려 남북한간의 타협가능지대는 한미간의 타협가능지대를 제외한 남한 선호지대의 거의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6〉의 선호관계 속에서는 남한이 핵문제에 있어 북한과 비슷한 선호를 가지면 가질수록 남북한간에 타협지대가 넓어지게 된다. 반대로 핵보유에 대해 반발하면 할수록 북한과의 타협지대가 좁혀지고 미국과의 타협지대가 넓어진다. 또한 어느 이해사안에서나 남한이 미국과의 입장차를 좁히면(왼쪽 또는 아래로 움직일 때) 좁힐수록 한미간 타협지대는 넓어지고 남북한간 타협지대는 줄어들게 된다.

〈그림 6〉 ‘북핵’과 ‘북한체제 보존’의 이차원적 공간분석



〈그림 5〉, 〈그림 6〉과 같이 공간적으로 2개 이상의 이해 사안에서 각 행위자간에 타협 가능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공간모델(spatial model)이라고 한다.²⁶⁾ 〈그림 6〉에 대한 각국의 선호점은 필자가 임의로 정한 것(ideal point)이므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위치선정을 바꾼다면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북한은 거부권자(veto player)이기 때문에 한-미 또는 남-북한 간에 타협을 이룬다 하더라도 양자의 합의로 다른 국가의 행위를 강제하지 못한다. 한미공조가 견고하다고 해서 북한이 이에 따를 것이 아니며 반대로 남북공조가 강하게 이루어져도 미국은 이를 무시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나 미국 또는 북미 양국이 자신의 선호점을 상대방 쪽으로 이동하여 양자간의 타협지대를 만들지 않는 이상 현상유지 이상의 해법을 얻기 힘들다.

3. 게임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공간모델의 개념 위에 ‘이익’과 ‘손실’의 구체적 수치가 보다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이론이 게임이론이다. 어떤 상황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이 결과의 득

26) 공간모델은 2차원 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차원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3차원 공간분석은 전체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나 실제로 정책안을 만드는 데에는 다소 복잡하게 된다.

실(得失)을 놓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치 경기(game)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게임이론을 통해서 남북한 관계 또는 국제관계를 이해할 때 간과해서 안 될 문제는 누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를 논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역사적인 복잡성 속에서 현실의 상황에 대해 ‘이래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적·감정적 기준은 배제된다. 남북한 관계의 수많은 감정적 골과 이데올로기적 대치가 게임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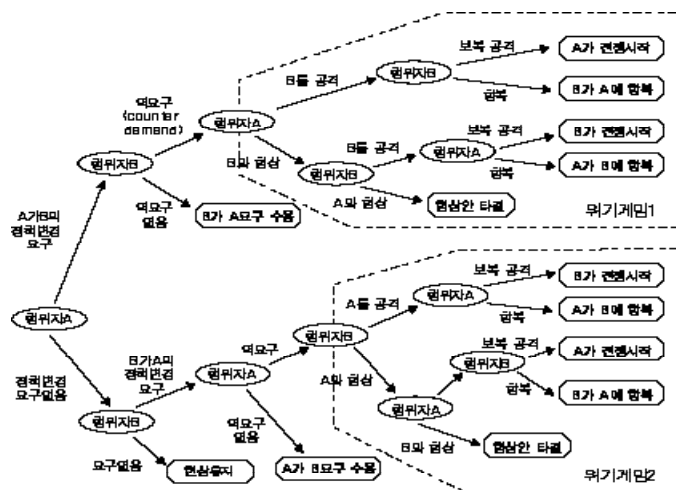
원래 게임이론은 계량경제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론이다. 경제라는 이해의 총합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손’의 다양한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또한 예측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이 이론이 경제학에서 유래되었다고 함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행위자의 선택이 명확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즉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결과를 서로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상황에 대한 서로의 정보와 인식의 수준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각 행위자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또 한 상대는 그만큼 ‘합리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사용되는 ‘합리성’의 측면에서, 북한은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과도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그들은 문제해결에 접근하기보다는 문제에서 손을 떼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예를들어 북한 핵문제나 미사일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전쟁광’이고 ‘과격 폭력집단’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며, 또한 오직 그런 이유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였고, 이것이 국제사회(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질서 옹호국가들)의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해결이 힘든 것이다. 어쨌든 게임이론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 행위자의 선호차를 극복하고 어떤 타협점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예측을 토대로 단계별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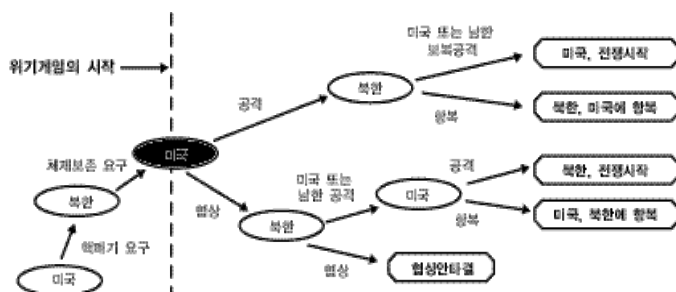
게임이론은 크게 전개형 게임(tree game)과 매트릭스 게임(matrix game)으로 구분된다. 전개형 게임은 상대의 행위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차례에 결

정을 해나가는 순차(順次)게임이며, 매트릭스 게임은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유용한 방식이다. 먼저 전개형 게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국제관계학에서는 이러한 게임을 국제상호작용게임(international interaction game)²⁷⁾ 으로도 부르는데, 전쟁과 협상의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그림 7〉 전개형 게임이론 모형



〈그림 8〉 북-미간 핵협상 게임



27) Bruce Bueno de Mesquita, op. cit. (2000), pp. 470–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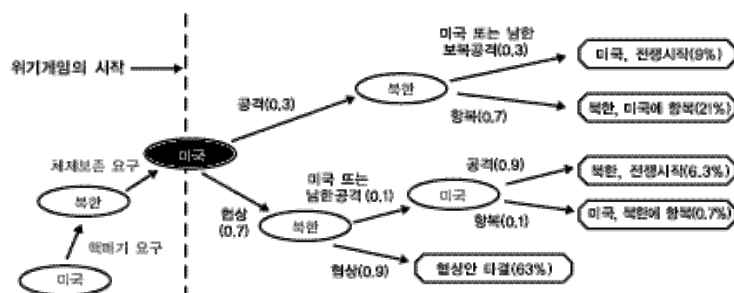
〈그림 7〉은 행위자 A(A국)와 행위자 B(B국)가 서로 갈등을 빚는 이해관계 속에서 행위자 A 또는 행위자 B가 상대의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상대를 압박하고 상대는 그러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가지치기를 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각 행위자는 〈그림 7〉과 달리 보다 많은 선택의 폭(options)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위자 A가 행위자 B의 정책변경을 먼저 요구하는 윗부분의 경우, 역요구를 받은 행위자 A는 ‘B를 공격’, ‘B와 협상’ 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동맹국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게임모형을 만들고 결정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위해 각 행위자가 끝까지 ‘게임’을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단계는 게임의 결과(outcomes)를 예측하는 전환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7〉을 북미간 핵협상과 대입해 보기로 한다. 미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등에 경제지원 및 체제보장을 먼저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그림 7〉의 아래 부분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북한 핵문제는 미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정책변경을 먼저 요구한 것이고 북한은 차후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북핵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7〉에서 윗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8〉에서 게임의 시작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정책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조건으로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고 역요구(counter demand)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위기게임의 시작' 선에 있는 미국은 협상을 통해 '협상안 타결'로 갈 수도 있고 또한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함으로써 핵폐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 지난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는 협상을 통해 게임을 마무리한 경우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협상은 그 진행과정에서 와해되었고 미국은 다시 위기게임의 시작에 놓여있다. 최근의 '10월 위기설'과 같은 전망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고 공격을 선택할 경우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전쟁 시작'의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북한이 항복하는 경우, '북한, 미국에 항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8〉에 의하면 우리는

북미 핵협상에서 5가지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중 ‘협상안 타결’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시작하든 북한이 시작하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다른 경우에도 국지전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5개의 예측 결과를 동일한 가능성으로 생각하면, 남한으로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 그런데 ‘협상안 타결’의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될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그런 예측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북한이 협상을 파기하고 미국이나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림 7>, <그림 8>과 같은 전개형 모델에서 단계별로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가정하면 최종적인 결과의 확률도 산출할 수 있다.

〈그림 9〉 확률로 보는 결과 가능성



〈그림 9〉는 각 행위자가 자신의 선택 단계에서 어느 한 정책을 선택할 것을 확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 전쟁시작’ 가능성은 $(0.3) \times (0.3) = 0.09$ 로 9%가 되며 ‘북한, 미국에 항복’은 $(0.3) \times (0.7) = 0.21$ 로 21%의 가능성을 가진다. 가장 큰 가능성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 ‘협상안 타결’로 가는 것으로서 63%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지 연구자의 임의적 가중치에 따라 결과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불과하지만 다른 여러 정보활동과 분석을 통해 이 수치는 보다 유용하게 예측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합리적 선택이론의 핵심 중의 하나가 선호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각 행위자의 선호가 상호 작용하여 어떠한 결과를 산출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의 확률은 각 행위자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써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하다. <그림 9>의 확률은 서로의 선호도가 파악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결과

를 유추해 본 것이다. 단 실제 실험에서 결과치의 값이 매우 정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예를 들어 0.435235 또는 34.5432%와 같은 수치) 그것은 별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케 한다.

이상에서 북한 핵문제를 통해 행위자가 결정을 교차하는 전개형 게임을 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분석의 목적에 맞춰 다른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면 핵사찰을 수용할지 여부와 국제사회(또는 미국)가 북한의 체제보장을 할지 또는 경제지원을 해 줄지 여부를 두고 다른 모형을 그려 판단해 볼 수 있다.²⁸⁾ 다양한 게임 틀(game framework)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게임이론이 다양한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 다른 분석이 제공됨으로써 예측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현실세계에서는 각 행위자가 상대의 생각과 입장(선호)을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혹자는 게임이론은 단지 지난 상황을 평가하고 짜 맞추는 기능밖에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또한 실제 일어나는 각 행위자간의 이해관계는 너무도 다양해서 행위자가 다수일 경우가 허다하고 실제로 선택의 경우도 단지 2개가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 특히 상대가 자신의 입장을 잘못 인식(misperception)할 경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게임이론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이 이론을 ‘학자들의 고차원적 유희(遊戱)에 불과하다’라는 혹평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게임이론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이론의 목적은 100% 정확한 예측을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복잡한 수식이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게임이론의 목적은 정책선택에 있어 경우의 수(options)를 늘리고 각각의 선택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의 기저가 되는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위해 전반적인 논리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스스로 논리 정

28) 이에 관련한 다른 모델은 김우성, 「신한국책략」(서울: 나남, 1999), pp.88~97 및 김재현, 앞의 책, pp. 204~206을 참조.

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 게임이론의 구조보다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살펴본 예는 복잡한 게임이론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준 것이다. 사실 행위자가 순차적으로 반응하는 위의 전개형 게임보다는 각 행위자가 동시에 반응하는 매트릭스 게임(matrix game)이 보다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트릭스 게임은 비겁자게임(chicken game)과 죄수딜레마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²⁹⁾ 그런데 이 게임이 남북한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즉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변화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각 게임에서 존재하는 균형점(Nash equilibrium) 또는 우위전략(dominant strategy)에 갇혀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포착되지 않는다.

남북관계에 있어 게임이론적 사고는 정책결정자에게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남북한 현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정서적으로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북한의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다. 즉 이 데올로기 등의 감정적 판단이 배제된 이론이기 때문에 순전히 이해득실의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객관적 현실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핵문제뿐만 아니라 식량지원,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의 여러 차원을 이슈별로 대입해 있는지를 보면서 왜 남북관계의 현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게임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남북관계의 여러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는 것이 항상 이루어질 수는 없다. 우리가 이익을 얻으려면 상대에게도 어떤 이익을 주어야 하고, 상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 차선(次善)이 결과로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화해는 결국 이익을 주고받는 게임의 법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29) 매트릭스 게임은 기존의 여러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주지하듯이 죄수딜레마 게임, 치킨게임 등이 널리 알려진 것들이다. 또한 행위자가 서로 간에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협조게임(cooperative game)과 그렇지 않은 비협조게임(non-cooperative game) 또한 제로섬게임(zero-sum game)과 비(non)제로섬게임 등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V

기대효용이론과 남북관계의 전망

1. 기대효용이론의 개념과 결과의 예측
2. 기대효용이론으로 보는 북한체제의 미래
3. 기대효용이론과 남북관계

1. 기대효용이론의 개념과 결과의 예측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각 행위자는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선호(preference)와 기호(tast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유형은 같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과자 하나를 사는 데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제각각 다른 상품을 구입한다. 입맛이 다르다는 것은 개개인이 제각각의 환경에서 성장하고 또한 독특한 경험에 따라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 규범과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양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행위유형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특히 국가)가 행동하는 양식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양한 행동양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단체 또는 사회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하기도 한다. 특히 국가라는 단위에서 행위유형과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일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고 예상해 오고 있다. 그러한 예측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존의 사회과학연구의 주류는 한 국가의 행위유형을 주로 힘(power), 이데올로기, 종교, 민족 등의 개념을 토대로 분석해왔다. 즉 주어진 과거와 현재의 조건을 중심으로 어떤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어느 사회 또는 국가의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예측하는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물론 힘이라는 복합적이고 변동적인 개념을 통해 이해추구라는 역동성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어느 한 국가의 행위를 현재까지 주어진 조건하에서만 판단한다면 어떤 예외적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진다. 즉 이런 식의 인식은 국제사회의 변동을 정태적(靜態的)으로 파악함으로써 변화를 보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왜 어떤 나라의 전쟁에는 개입을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방관하였는지를 이해하기 힘들다. 자유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한 바 있는 미국은 아프리카와 동유럽의 분쟁에는 느긋하게 지켜보다가 마지못해 개입하는 시늉을 했을 뿐이다. 정태적인 행위유형의 분석틀 속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 동서냉전의 특수한 이데올로기적 환경이라는 조건을 대입하더라도 냉전 이후에 나타난 비(非)일관성에 대해서는 미약한 변명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듯 인간 및 국가 행위의 원인(동기)에 대한 설명은 단순히 정태적 시각이나 경험에 근거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맥락에서 보면 각 행위자는 주어진 규칙 하에서 자신의 선호를 기반으로 최선의 이득을 추구한다. 그런데 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최상의 이득을 얻으려는 ‘합리적 인간’의 본성에 반(反)하는 행위는 어떤 논리로서 설명될 수 있는가?

바로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이라는 논리를 통해 이를 설명할 수가 있다. 경제학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도 기대효용이라는 단어는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다. “그 사업은 기대효용이 낮아서 수용할 수가 없어!” 또는 “높은 기대효용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등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바로 그 개념이다. 국가간의 행위도 바로 이와 같은 기대효용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효용이론의 골격이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이 개념을 국제정치학에 도입한 최초의 학자는 메스퀴타(Bruce Bueno de Mesquita)라는 학자이다.³⁰⁾

메스퀴타에 의해 이 이론이 국제정치학에 도입됨으로써 그동안 상호간에 경쟁을 하던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과 세력우위이론(power preponderance, 예를 들어 힘의 전이이론)간의 전쟁원인에 대한 적합성 논쟁은 하위 논의로 강등되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력균형이론은 힘이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침략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동맹을 통한 균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전쟁 방지책이 된다. 이에 비해 세력우위이론은 힘의 전이(power transition)가 전쟁의 원인이며, 전이를 일으키는 도전국가의 현상(status quo)에 대한 만족도 또는 불만족도가 전쟁의 주요동기가 된다.

여러 학자들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볼 때 세력우위 이론은 세력균형이론

보다 그 적합성이 업그레이드된 이론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시발(始發)이 도전국(challenger)에 있느냐 또는 방어국(defender)에 있느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상호 대립적이며 또한 일반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대효용이론은 양자의 주장을 모두 아우르는 일반성(generality)을 제공한다.

기대효용이론을 국가간의 전쟁행위를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서로 간에 국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자. 여기에서 A의 국력을 1이라고 하고 B의 국력을 5라고 하자. 세력균형이론에 따르면 B가 전쟁을 일으켜야 하지만 실제 전쟁은 A가 일으켰다. 그렇다고 A가 국력상에 있어서 B를 추월(overtaking)하려는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세력우위이론에 따라 설명하기도 힘들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대효용이론이다.

기대효용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P)과 그에 따른 이익(W)을 곱한 것(즉 PW)과 전쟁에서 패배할 확률(1-P)과 그에 따른 손실(L)을 곱한 것(즉 (1-P)L), 이 둘을 합한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보다 얻을 득실(O)보다 클 경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아래와 같은 (부)등식을 이용하면 이해가 쉽다.

$PW + (1-P)L > O$	▶ 전쟁을 시도 (1)
$PW + (1-P)L = O$	▶ 현상을 지속 (2)
$PW + (1-P)L < O$	▶ 전쟁을 회피 또는 무관심 (3)

위의 예에서 A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저한 국력차로 인해 A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P)은 겨우 0.1(10%) 정도이다. 그런데 만약 승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W)이 10이라고 하자.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이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수준으로 0이다. 현상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 전쟁에서 진다해도 별로 큰 손해(L)가 없다. 손해의 양을 -1 이라고 하자. 수식에 따라 A가 획득할 수 있는 득실을 대입해 보면, $0.1(\times)10 + (1-0.1)(\times)-1 = 1 + (-0.9) = 0.1$ 이 되고 현상에서 얻을 수

30) 기대효용이론에 대해서는 Bruce Bueno de Mesquita, "The Contribution of Expected 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in Manus I. Midlarsky, (ed.), op. cit. Bruce Bueno de Mesquita, op. cit. 참조. 앞 논문은 번역되어 나와 있다.

있는 득실인 0보다 높다. 즉 $0.1 > 0$ 의 경우로서 (1)의 경우와 같이 전쟁을 시도할 만한 기대효용이 생긴다.

결국 현상적으로 볼 때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전쟁을 하는 A의 경우, 나름대로는 전쟁을 하는 것이 가만히 항복을 하거나 현상에 안주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전쟁에 참가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약에 구한말 조선이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그냥 이대로 합병되느니 지더라도 더 이상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그럴 수 있었으리라. 즉 기대효용이론은 기존의 이론으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전쟁의 발발원인을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로 만들어준다.

여러 학자들의 경험적 분석에 따라 기대효용 이론이 세력균형이론이나 힘의 전이이론보다 전쟁 원인을 설명하는 데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이론의 모순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기대효용이론은 전쟁의 원인을 단순히 상대적인 힘의 차이와 개별적인 이해(interest)관계의 충돌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지 않고, 힘의 차이에 따른 승리의 가능성과 승패에 따른 득실의 효용까지 함께 고려한 보다 세련된 논리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길 가능성과 결과에 따른 득실을 주관적으로 잘못 판단할 경우, 객관적인 관찰과는 달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오인(misperception)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³¹⁾

기대효용이론을 통해 국가의 행위유형에 대한 앞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 국가행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규범이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논리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기대효용이론을 능가하는 논리가 개발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전쟁론과 외교정책 결정 분야에 있어서 이 이론이 가지는 효용은 이미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9.11 뉴욕 무역센터 폭파사건과 같은 테러범들의 가치 지향적(value-oriented) 인간행위를 기대효용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로 남는다. 주어진 규칙이 없는 독특한 행위가 국

제사회에 커다란 충격파를 주는 상황에서 분석단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과제로 남기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 역시 나름대로 주어진 규칙 내에서 최상의 기대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핵위기의 소용돌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으며 또한 미사일문제에 있어서도 주어진 규칙을 깨기보다는 그 규칙을 심분 활용하여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가라는 실체가 분명하고 또한 이해득실에 밝다는 점에서 북한은 기대효용이론을 통해 그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2. 기대효용이론으로 보는 북한체제의 미래

기대효용이론의 기본구조는 국가의 행위 역시 경제학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이익과 손실(기대효용)의 면밀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자신의 이익추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위의 형태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기대효용의 예측은 한 국가를 전쟁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남북관계에 있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현재 남한이 미국과의 동맹으로 이루어진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공격한다면, 승리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승리가 가져다 줄 보상에 비해 그것을 위해 희생해야 할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즉 전쟁을 일으킬 기대효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고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 국가'인 남한의 기대효용과 부합하는 외교노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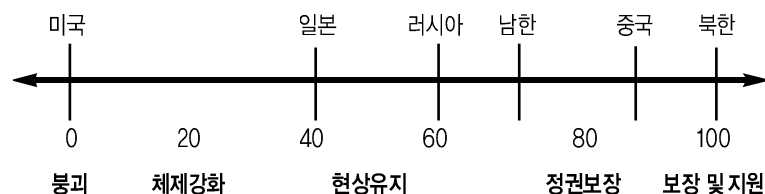
기대효용이론은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거대이론의 성격과 함께 외교정책결정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전쟁행위도 하나의 외교행위라고 본다면 기대효용이론은 한 국가의 외교노선을 정하고 또한 상대방의 전략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기대효용이론가들은 홍콩의 중국반환 이전에 그 미래상을 거의 완벽하

31) 오인으로 인한 전쟁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Robert Jervis, "War and Misperception," in Robert I. Rotberg Theodore K. Rabb (eds.), op. cit., Ch. 6 참조.

게 예측해 낸 바 있다. 기대효용이론의 이러한 기능은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활발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측이 가능하면 국가의 외교행위에 있어 불필요한 행동들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무모한 충동을 피할 수 있다. 대략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게 된다면, 무모하게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극단적이고 모험적인 외교행태는 줄어들 것이다. 요컨대 외교행위의 전략적 선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대효용이론이 외교정책 결정과 그 예측에 있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한다. 이 이론의 적용을 위해서는 어떤 사안에 있어 참여국가(또는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position)과 그들의 힘(power) 그리고 중요도(salience)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밀고 당기는 각국의 기대효용에 대한 판단의 합(合)이 예측의 결과가 된다. 현재 북한정권의 미래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미래를 예측해 보기로 한다.

〈그림 10〉 김정일정권의 미래에 대한 각국의 입장



위의 그림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이해 당사국들의 외교적 선호도를 수치화 하여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수치는 필자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방대하고 보다 전문적인 자료를 통해 위치를 정해야 한다) 즉 미국과 북한은 각각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보장 및 지원’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주변 관련국들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해 당사국의 입장을 알고 난 후 우리가 할 일은 각국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남한의 힘을 20, 미국 100, 일본 40, 러시아 30, 중국 80, 북한을 10으로 가정한다. 또한 각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

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사안의 당사자인 남북한은 각각 100%이고, 미국 80%, 중국이 80%, 러시아가 50% 그리고 일본이 60%라고 하자. 각국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중요성을 두느냐는 자신의 힘(power)을 어느 정도 사용할 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자국의 이익과 거의 관련이 없는 아프리카 오지의 종족간 분쟁에 별 관심이 없으면 미국의 영향력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국의 힘과 중요도를 수치화 하는 이유는 각국이 그들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만큼의 영향력(influence)을 행사할 것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영향력은 각국의 힘과 중요도를 곱하여 구한다. 계산을 해 보면, 남한은 $20(20 \times 1.0)$, 북한 10, 미국 80, 일본 24, 러시아 15 그리고 중국이 64가 된다(표 1 참조). 미국은 막강한 힘과 중요도로 인해 이 사안에 있어 80이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자국에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남북한의 영향력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장래가 당사자인 북한 또는 남북한자체의 입장과는 달리, 주변국들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개연성을 나타낸다.

즉 어느 국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엄청난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약하면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해결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없다. 반대로 강대국의 경우는 자신들에게 큰 중요도가 없더라도 간섭(또는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상황의 핵심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기대효용이론에 따르면, 남북한 문제는 단지 남북한만의 문제가

〈표 1〉 북한정권의 미래에 대한 영향력 지수

행위자	입 장	힘	중요도	영향력(×)
미국	0	100	0.80	80(80)
일본	40	40	0.60	20(104)
러시아	60	30	0.50	15(119)
남한	70	20	1.00	20(139)
중국	90	80	0.80	64(203)
북한	100	10	1.00	10(213)

아니다. 남북한이 아무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민족공조, 민주자주의 가치를 높이 추창하더라도 관련된 이해당사국들의 입장이 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그들의 지지 없이 남북한만의 합의나 선언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미래에 대한 문제로 되돌아오면, 문제의 해결은 영향력의 중간 값(median number)³²⁾에서 결정이 나게 된다. 즉 각국의 입장과 영향력의 중간 값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외교적 타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향력의 중간 값을 점하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의 중간 지점의 입장이 예측되는 귀착점이 된다. 6개국의 영향력 지수의 합은 213이며 그 평균은 106.5가 된다. 106.5는 영향력의 누계(累計)상 일본과 러시아의 사이에 존재하므로 각국은 일본의 입장과 러시아의 입장 사이에서 협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림 10>에서 보면, 일본과 러시아는 40과 60으로 그 사이에 현상유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면 북한에게 우호적인 현상유지가 김정일 정권의 미래가 될 확률이 높다.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남한의 정책(입장) 변경을 압박한다면, 일본의 입장 즉 김정일 정권에 대해 비협조적인 현상유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결국 김정일 정권의 장래에 대해 관련 국가들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경우, 위의 조건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또는 비우호적인 현상유지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위의 예는 실험과정을 아주 단순화시킨 것이고, 원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론을 예측한다. 특히 각국의 입장과 중요도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분석하여 산출한다. 또한 각국의 힘(국력) 또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산출해야 한다.³³⁾

또한 분석단위를 국가가 아니라 국가내의 인물 또는 기관, 단체의 수준으로까지 구체화시키면 예측은 매우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행위자

를 대통령, 상원, 하원, 언론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입장과 힘, 중요도 등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각각의 입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³⁴⁾ 남한을 보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야당과는 대립적이다. 여기에 언론도 제각각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각 사회단체가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치화하고 상호간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하나의 결론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실제적으로 데이터의 수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당과 군부 그리고 여타 기관의 통일·대남전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기대효용이론의 예측능력은 데이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과 그것의 수치화에 있어 지역전문가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위의 예와 같은 방법의 분석과정을 겪게 되는데, 분석단위 상호간의 영향(강요, 설득, 타협, 복종 등)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³⁵⁾ 수많은 계산과 반복되는 상호간의 영향을 단계별로 측정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단계(round)별로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즉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태의 추이를 예측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게 된다. 최근 들어 각 행위자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미국 정부 등에서 대외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³⁶⁾ 마치 워 게임(war game)을 통해 전쟁을 예측하듯이 시시각각으로 외교정책의 추이를 컴퓨터를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로 필자가 남북한 통일을 수십 개의 행위자를 대입하여 실험해 본 결과, 아쉽게도 현상유지 또는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찾는 정도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남한 대통령의 입장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는

32) 중간투표자의 원리에 대해서는 Duncan Black and R. A. Newing, *Committee Decisions with Complementary Valuation* (London: Lowe and Brydon, 1951)과 Melvin J. Hinich and Michael C. Munger, op. cit. 참조.

33) 국력에 대한 평가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하고 있다. Ray Cline 등의 초기 연구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Hans J. Morgenthau와 국제정치학의 대가도 스스로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Politics among Nations, op. cit. 그러나 이 글에서 국력의 개념은 경제력과 정부능력의 상관관계로 측정하는 Organski와 Kugler의 입장을 따른다. A. F. K. Organski, op. cit. (1958)과 A.F.K. Organski and Jacek Kugler, op. cit. (1980)을 참조.

34) 각국의 정책결정자가 상대국의 입장을 예측, 상호간 영향력이 오고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과정도 실제 분석에서는 중요한 예측과정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는 Bruce Bueno de Mesquita, op. cit., (2000) pp.507~512를 참조.

35) Bruce Bueno de Mesquita, *The War Trap*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1)과 Bruce Bueno de Mesquita and David Lalman, *War and Reason* (New Haven: Yale University, 1992) 참조.

36)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해서는 <http://www.eugensoftware.org> 또는 <http://www.bdm.cqpress.com> 을 참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원만함 장보기 파악된 시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각 단계(round)의 결과 값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유용할 것인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을 매우 유연하게 변경해 보기도 했지만, ‘흡수통일’ 또한 ‘남북연합’의 해답(solution)을 찾지는 못했다. 그 실험을 통해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남북한 통일에 가장 반대하는 행위자가 미국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반대하는 경우, 남북한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필자의 실험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한 미국의 입장도 변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결정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변 4강중에 어느 한 국가라도 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남북한의 통일은 매우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3. 기대효용이론과 남북관계

최근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이라고 불리는 방법론 논쟁이 한창이다. 이 운동은 일련의 젊은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한 방법론 논쟁을 뜻한다. 이는 미국 정치학계의 합리적 선택이론과 같은 수량적 방법론이 정치학을 현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문제의 제기이며 운동이다.

정치학이 고도의 통계기법을 사용함에 따라, 현실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분석에 적합한 현상만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기법이 정교해질수록 점점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들에만 매달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정치학을 현실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석학, 민속학, 역사학, 제도주의 등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위의 IV장과 V장에서 다룬 이론들은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이 비판을 가하는 핵심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의 핵심이 정치학에서 합리적 선택이론 혹은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전적으로 배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고도의 통계기법만이 방법론을 독점하려는 상황에 대한 반성인 것이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정치학적 상상력을 사장(死藏)한다는 위기감의 표현인 것이다. 과거 고전 정치학이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 신제도주의 등으로 변화를 거듭하였듯이 이러한 학문적 논쟁은 상호간의 장점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매듭될 전망이다. 현대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 선거

자료 통계나 경제 통계 없이 정치학을 한다는 것은 미적분(微積分)과 역학(力學)을 모르면서 공학(工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학 분야에서 양적 방법론만이 헤게모니를 가지는 ‘독점’의 분위기다. 합리적 선택이론과 같은 양적 방법론이 현실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수량모델은 연구자가 원하는 현실만을 취사선택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와 남북한 협상에서 게임이론을 비롯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활용성은 독자적인 기능 뿐 아니라 기존의 감정적이고 비체계적인 논의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념적·감정적인 부분에 투여될 역량의 일정 부분만이라도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방법론은 기존의 논의를 더욱 심도 있고 일관성 있게 만드는 도구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각 상황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은 두 번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주지하듯이 남북관계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입장과 정책이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종합적 현상이며 결과이다. 물론 남북관계의 주요 행위자는 남한과 북한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남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북핵과 관련된 최근의 진행상황을 보면 남한의 입장과 전적으로 동일한 편에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결국 남북한 관계와 함께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남북한 관계이고 한반도 정세이다. 크게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보다 작게는 동북아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 남한의 대외정책 결정은 국내적인 여론과 지지의 획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수많은 개인과 단체, 국가와 제도들의 이해관계와 스스로의 입장만 강조하고 이러한 구조를 간과한다면 남북한 관계의 합의된 정책과 결과를 만들기 보다는 혼란과 갈등만이 조성될 것이다. 기대효용이론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단지 미래에 대한 기술적 예측 가능성뿐만 아니라 합의와 조정을 통한 차선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VI

테러리즘과 민주주의론

1. 테러리즘이론과 북한
2. 민주주의론과 남북관계
3. 남북관계의 현실

1. 테러리즘이론과 북한

2001년의 가공할 9.11테러를 계기로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과 반(反)테러리즘의 기치가 드높은 상황이다. 반테러리즘의 연장에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응징을 하였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테러리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가공할 보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테러리즘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거의 초유의 것이다. 유명과 같은 존재와 싸워야 되는, 기존질서를 옹호하려는 세력의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선(battle line)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쪽은 현상을 유지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쪽이다. 현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쪽은 수많은 공격대상 중에서 목표를 정한 후 기꺼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행동대원들에게 작전과 지시만 내리면 된다. 이 점이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고, 애꿎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국민들이 전쟁의 무고한 희생양이 된 이유이다.

군사학적 또는 전략적으로 테러리즘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전(게릴라전)의 양상을 띤다. 대등한 세력간의 무력충돌이 아니라, 월등하게 우월한 기존세력과 그것을 타도하거나 저항하려는 소수가 벌이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를 비롯하여, 우리의 과거 독립군운동, 중국의 마오쩌둥, 월남의 호치민이 이끌었던 전쟁의 양상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프랑스와 한국의 예가 정규전을 보조하는 역할로 기능했다면, 중국과 월남의 예는 정규전이 게릴라전의 형태로 변모한 중대한 전기(轉機)였다.

게릴라전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³⁷⁾ 첫째는 정보를 강화하여 상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란·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이른바 ‘미치광이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상대라고 의심될 만한 모든 대상에 퍼붓는 것

37) 냉전이 해체된 이후 벌어지는 비국가간 민족전쟁 또는 게릴라전에 대해서는 Donald M. Snow, *Distant Thunder* (New York: M.E. Sharp, 1997) 참조. Snow는 이 책에서 게릴라전과 같은 비정규전을 'insurgency'라고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효율적 대응이 기존의 전쟁양식과 비교해 절대로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다.³⁸⁾ 게릴라들의 비인도적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보다 강력하게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탈냉전 이후 국가단위의 전쟁과 더불어 국가내부의 민족분쟁과 국제적 테러조직들의 폭력행위들이 국가안보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조정하고 통제·관리할 것인지가 미국 등 기존질서의 유지를 원하는 지도국들에게 중대한 과제이다. 유고슬라비아의 붕괴로 비롯된 보스니아, 코소보 사태와 최악의 종족간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소말리아, 르완다 등의 학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해묵은 원한이 만들어 낸 테러와 반테러의 악순환,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일부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상권을 둘러싼 조직들의 폭력 등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국가 내부적으로 또는 특정지역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가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민족분쟁과 테러리즘은 결코 그들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현 국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등의 일류국가들(꼭대기 층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해서 first tier states라고 부른다)은 이러한 무력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다. 이런 와중에 가공할 9.11테러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대(對)테러리즘 정책의 향로를 급격하게 강화시킨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테러리즘 또는 국내적 반란은 과거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의 반란은 주로 정치·이데올로기적으로 기존의 정부와 상반되는 집단이 무력을 사용하여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무력행위에 있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guide line)이 존재했다. 즉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거나 죽이는 등의 행동은 제한되었고, 폭력의 대상은 정부기관이나 관리 등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테러리즘과 반란 양상은 그 주체가 꼭 권력찬탈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제한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의 모습을 띠고 있다. 즉 그들의 행위가 꼭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들의 목표

와 위신을 강화하기 위해 또는 특정 이데올로기(예를 들어 이슬람 근본주의)의 선전을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종문제와 종교문제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유산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의 행위를 국경선을 강화하고 무력을 증강하는 등의 전통적 군사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다.

폭력의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보복의 확산’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비(非)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인 이들을 보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들은 소수의 숫자로 여러 국가에 나뉘어져 있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의 형태가 매우 느슨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힘들기도 하다. 즉 국가 대 국가의 전쟁에 있어서는 어느 한 국가가 무력을 행사하면 상대가 그들의 영토에 대해 보복을 할 수 있지만, 비국가행위자인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목표를 정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일반인들과 섞여서 살기도 하고, 본부를 자주 옮기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9.11 직후 즉각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정권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것은 테러조직에 대한 보복에 있어서 그들을 비호하는 국가단위의 대상을 지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테러단체뿐 아니라 그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며 또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세의 개입을 받게 될 것임을 예견케 한다. 바야흐로 앞으로 국가는 자국내 테러단체에 대한 통제력을 요구받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반테러전쟁은 이제 국제질서를 흔드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한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여기에서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되어 있는 북한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이 ‘깡패국가’ 또는 테러단체가 대량파괴무기인 핵무기와 생물·화학무기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미국 등의 일류국가들이 지향하는 미래상에서 매우 중대한 위협요인의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깡패국가이자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면서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의혹을 수년째 받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악의 축(axis of evil)’과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라는 별칭을 선사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 안보전략 중에는 분명 예방전쟁 또는 대량보복의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다.

38) 미치광이 이론은 ‘주의 사람들이 당신의 다음 행동에 대비할 수 없고 당신을 두려워하게끔 예측할 수 없는 언행을 보여야’라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응용한 것으로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대외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된 바 있다. 노엄 촘스키, 『불량국가』 (서울: 두레, 2001) 참조.

1994년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엿보았으며, 현재 북한이 어떤 모험주의적 행동을 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북핵문제로 미국과 오랜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소위 비랑끝 전술을 펼치면서도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8월 6일과 9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노동신문」은 대변인 담화와 논평을 통해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중 하나인 ‘OP-5027-04’에 대해 북침의도를 가진 계획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조평통은 “미제와 남조선 군부가 북침전쟁 계획을 더욱 완성하려는 목적 밑에 작전계획 5027-04를 새로 꾸며냈다”고 비난했으며, 「노동신문」은 ‘전쟁 광신자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이 남한 군부와 작당해 종전의 북침전쟁 계획을 세부적으로 완성한 작전계획 5027-04를 새로 작성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그러면 ‘강단 있는 핵외교를 펼치면서도 북한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군사 작전계획이라는 것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2004년 3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대북 작전계획에 대해 보도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안보 정책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소개한 바 있다. 밝혀진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미 관련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먼저 OP-5027-04와 같은 표시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면, ‘OP’는 Operation Plan의 약자로 작전계획을 뜻하며 ‘50’은 한반도 전장(戰場, theater)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반도 관련 작전계획은 모두 OP-50XX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된다. 제일 뒤의 숫자는 작전의 개정 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위의 ‘04’는 2004년에 개정된 것을 뜻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한반도 작전계획은 각각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가정한 전면전(5027), 이라크전에서 본 것과 같은 외과 수술적 공중폭격(5026), 북한붕괴를 대비한 작전(5029), 내란 도모용의 국지적 폭격작전(5030) 및 OP-5027의 판단착오를

대체하는 작전(5028) 등이 있다. 따라서 OP-5027-04는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작전으로 올 2004년에 개정된 것이라는 뜻이다. OP-5027의 경우 2년마다 새롭게 수립되며 다른 작전계획도 1~2년에 한번 씩 수정·보완된다.³⁹⁾

다시 테러리즘의 맥락으로 돌아와서 테러지원국으로 낙인된 북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케네스 윌즈 같은 학자는 깡패국가와 테러단체들도 다른 국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합리적(rational)’인 행위자이며 따라서 오판(miscalculation)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도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목적행위를 하므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⁰⁾ 그러나 실제로는 느끼는 위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첫째, 구소련의 붕괴와 과학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대량 살상무기의 획득이 비교적 용이해졌고 둘째, 행위의 목적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셋째, 더욱이 이들 국가나 집단에 히틀러와 같이 일탈적 사고를 가진 자가 리더로 나타난다면 예상치 못할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은 이라크 등과 함께 여전히 국제사회의 요주의(要注意)국가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북한은 국가수준의 행위자이고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비교적 ‘합리적인’ 행동을 해 왔다는 점에서 탈냉전

39 이미 알려진 한미연합군의 대북 작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OP-5027은 남침을 대비한 전면전 계획이고, OP-5026은 제한적인 공중전(Air Strike) 계획이다. 연병 행 시설 등 북한 내 전략 타격을 실행해 정밀타격(Surgical Strike)하되 전면전(Major Theater War)은 피한다는 개념이다. 북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은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사라크(Osra)핵시설을 집중 폭격한 선례를 따른다. B-2 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전역의 전략 거점들을 동시에 타격한다. 주자하듯이 1993~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미국 군부에서는 연병 폭격계획을 구상한 바 있으나 한국과 일본 등의 적국인 반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정밀타격은 북한 전역에 산재한 미사일이나 핵 포탄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핵시설 파괴에 대한 평가는 확실 무효와 함께 북한의 보복타격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미국은 지대로 파고 들어가는 초소형 핵탄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OP-5027은 본연에서 언급되었던 전면전 계획이다.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 전역 및 통치기구를 포격하고 있다. 1994년부터 한미연합군은 2년 단위로 OP-5027를 개칭하고 있다. 1998년 계획에는 최대 69만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전면전이 구상된 바 있으며, 2002년 계획에는 김정일 국무위원장 제거 작전이 포함됐다. OP-5028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 중 제1차 한반도 OP-5028-96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OP-5027이 '절대된 판단'이라고 생각될 때 변경할 또 다른 전면전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 OP-5029는 북한통공을 대비한 작전계획이다. 주한미군과 한국이 공동 추진하는 작업으로 북한 안의 대량 유인 사태 및 북쪽전경 동시치 어려울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다. 1999년 8월 존 테일러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의 북한통공 시나리오에 대해 '이런 계획이 없다면 오히려 더 신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바 있다. OP-5030은 북한 동요를 위한 작전계획이다. 전쟁 발발 이전에 김영일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저강도(Low-Intensity) 작전을 구사해 북한의 체제된 자원을 고갈시켜 군부의 기능을 유동해 강경일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에이슈 뉴스 네 월드리포트'는 2004년 7월, 이 작전계획에 대해 보도하며 '미국방부는 강경일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계열의 비밀작전계획을 짜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료는 www.worldaffairs.org를 참조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이영우, '한미연합군 작전계획과 북한의 불안함', 『동북아연구』 (2004년 9월호) 및 이정은, 'OP-5029 폐지 주장에 얽힌 논란', 『동북아연구』 (2005년 5월호) 참조.

40)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 Wesley, 1979).

이후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테러행위자로 분류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9.11 이후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안정이 되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손을 볼 수' 있다는 확전(擴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테러지원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들이 잔뜩 몸을 사린 채, 소나기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가 파국(破局)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북한이 미국의 반테러정책에 따라 다음 목표가 될 확률은 별로 없다. 언급했듯이 북한은 국가단위의 행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무모한 테러를 감행하기 힘들다. 또한 북한은 견고한 중앙집권체제로서 반란이나 종교적 이유로 충돌이 일어날 확률도 거의 없다. 따라서 어떤 테러를 감행할 경우, 그것은 중앙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보복은 즉각적으로 북한정권의 종말과 연결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엄살을 떨었듯이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바로 그 날로 북한지역은 초토화될 것이다. 보복의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이 모를리 없고 따라서 무모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북한은 아웅산 테러사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테러의 전력(前歷)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합리적 행위자 북한과 테러국가(또는 지원국) 북한의 양면성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테러는 대부분 남한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세계질서의 교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주도의 테러행위에 대한 대비는 무엇보다도 남한의 몫이 된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하든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든 테러행위를 펼치기에는 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이제 남북한은 경쟁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를 통해 남한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이 북한에게 이롭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정권이 내부적으로 통제력이 약화되어, 보다 완고한 무력집단(예를 들어 군부)이 현 김정일정권과 대립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북한은 전통적 수준의 방어대상이지 새로운 개념의 테러집단으로 볼 수 없다. 이점은 국제사회와 남한이 북한의 정권이 가능한 한 안정적이기

를 바라는 이면의 목표이기도 하다. 김정일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체제의 혼란은 현재의 남한에게 별다른 이득을 줄 수 없다.

2. 민주주의론과 남북관계

부시 2기 행정부의 신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임명청문회를 통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 중 하나로 지명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논리적으로 '악의 축(axis of evil)'인 테러지원국으로서 미국의 공격대상 후보에 올라 온 것인데 민주주의의 확산대상으로서 붕괴되어야 할 정권이라는 규정 속에 놓이게 되었다. 마치 지난 2차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을 '악(惡)의 화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김정일이 '마땅히 처단되어야 할' 악당으로서 공격대상이 될 정당성이 축적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세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악당을 응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이른바 민주주의론이라고 불리는 논리가 존재한다. 민주주의론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오직 비민주적 국가와 전쟁하며 또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주장한다.⁴¹⁾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 세력과 비(非)민주주의 세력의 충돌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은 좋은 예가 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승리가 확정된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정권이 들어설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된다. 오로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지만, 아마도 현실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이상 그 자체 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친미적 정권의 탄생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언급했듯이 전쟁이론에 있어 민주주의와 전쟁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들이 모두 전체·독재주의 적정체제였다는 경험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국력의 차이와 이해의 추구라는 전통적인 전쟁이론의 중심적 주제와는 별개로 이 논리는 국내정치의 체제

41) Michal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12 (1983), pp.205~235; Bruce Bueno de Mesquita and David Lalman, *op. cit.*, Ch. 5.

적인 측면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인지하듯이 이 논리는 지난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체제가 전쟁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발전된 논리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전쟁이론의 제1명제는 요컨대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서로 간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²⁾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일단 그들의 논리를 따라 가보기로 하자.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전쟁이 가져올 피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전쟁을 회피하라는 압력을 가함으로써 전쟁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투표를 통해 자리를 차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지지 없는 전쟁을 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선불리 전쟁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확하고 그럴듯한 논리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보다 민주화되면 될수록 국가간의 전쟁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이 이론은 바로 근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논쟁의 여지가 생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원초적인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가? 또한 미국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체적으로 여러 정치지표를 통해 민주주의적 국가와 비민주주의적 국가를 상대적으로 분류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치적 개념인 민주주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듯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 논리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정치·경제적 부담 때문에 전쟁을 하기보다는 타협과 절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제는 매우 취약한 주장이다. 또한 경험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모든 전쟁이 비민주주의 국가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주의와 전쟁의 관계에 대한 제2의 명제가 추가된다.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간에 이해의 상충이 있을 때,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불사한다. 특히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반드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전쟁은 확산된다. 민주주의 국가들 상호간에는 안 싸우는데, 비민주주의 국가와는 싸울 수 있고, 또한 확실하게 한판 승부를 가린다는 말이다. 결국 일단 전쟁이

라는 흉폭한 게임에 발을 담그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구별은 사라지고 승리를 위한 이전투구(泥田鬪狗)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정치체제간의 전쟁은 중도에 타협을 통해 해결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한 쪽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간에는 항상 무력충돌의 긴장감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쟁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화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상호간에 이해갈등의 타협과 협상이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평화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라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선진국들은 구소련(러시아)과 중국 그리고 기타 비민주적 국가들에 대해 민주주의의 장점을 선전하고 그 제도를 이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이 논리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좋은 나라', '나쁜 나라'를 양분(兩分)하여 전쟁놀이를 한 것을 연상시킨다. 좀 유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좋은 나라(민주주의의 국가)는 선(善)하고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쁜 나라(비민주주의의 국가)가 공격하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흠뻑 두들겨 패준다는 논리이다. 최후의 승자는 당연히 민주주의국가이다.

다소 유치한 이 논리는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흐름과 맞물려 우리에게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⁴³⁾ 경제분야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하나의 '민주주의적' 규칙을 만들어 각국이 하나의 규범 속에서 이해를 추구하고 타협·조정해 나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표이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다. 세계무역기구(WTO) 또는 서방선진국(G7+1) 회의가 열리는 곳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몸짓이 거센 것을 볼 수 있다. 왜 서방 선진국들은 자유주의를 옹호·확대하기 위해 매진하고 또한 그것에 반대하는 무리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세계적인 규범을 만든다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43) 신자유주의이론에 대해서는 Robert Keohane과 Joseph Nye의 연구성과가 주축을 이룬다. 신자유주의이론의 개념과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Robert Keohane & Joseph Nye,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in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Ch. 2 참조.

42) 민주주의이론의 명제정리는 김우상, 앞의 책, pp. 211-215 참조.

주류국가 또는 주류계층간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주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박탈감을 느끼는 국가와 계층이 생기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제1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극단적으로 51%의 다수가 49%의 소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그나마 원활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소수에 대한 배려가 같은 국민이라는 일체감 속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이해추구는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해의 타협이 쉽지 않다. 또한 점점 고도화되는 국제적 분업구조와 과학기술의 격차가 모든 국가를 이미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애초에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국가란 존재하지 않고 더욱이 현재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세력들이 이 문제의 해결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각국이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의존의 확대와 상호협력의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 구축을 통해 어떤 공통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본다. 특히 새로운 레짐을 구축하려고 하는 세력과 이미 상당한 국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대부분이 권위주의적이거나 그 경향을 가지고 있는)은 다른 목표를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국가들이 주도국들의 공정성과 은덕(恩德)을 기대하고 무작정 그들을 따라가기에는 지난 세계사의 경험이 큰 장애가 된다. 상호 협력적 국제레짐의 출현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제도의 형성과 일방적 가치의 추종은 자칫 획득한 목표에 버금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3. 남북관계의 현실

그러면 국제사회의 이러한 논리는 남북한 관계에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가? 쉬운 비교를 위해 남한을 민주주의 국가로 보고 북한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구분해 본다. 또한 남한이 지금 북한에 대해 취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상호간의 민주적 규칙을 위한 레짐을 형성하는 노력이라고 보자.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남북한 상호간의 입장을 따로 놓고 보면 매우 상이한 대응을 하게 된다.

먼저 남한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기로 한다. 남한은 지금 비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을 민주주의화하여 평화적인 교류·협력의 틀(레짐)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황이 진척되려고 하면 북한은 이내 비민주적인 태도로 상황을 뒤틀고 원점으로 되돌리곤 한다. 남한으로서는 단 한번도 비민주적이고 비호혜적인 정책을 제안한 적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기도 한다(예를 들어, 비전향 장기수들의 복송, 대북 식량지원 등). 따라서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의 비민주적이고 규칙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 결과, 민주적인 남한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북한의 입장은 남한의 경우와 다르다. 남한주도로 이루어지는 남북한 교류는 결국 남한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동등한 이익의 실현을 위해 각종 협력사업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남북한 협력을 통해 100이라는 이익이 창출된다면, 투자비용과는 무관하게, 최소한 50의 이익은 자신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또한 ‘공화국’의 고매한 주체사상과 충돌하는 ‘서구제국주의’ 세력들의 민주주의 개념이 남북한 관계의 주요원리가 될 수는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체제작동 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북한은 더더욱 민주주의적 원리의 확대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는 한에서 남북한 총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북한주민이 북한체제로의 통일을 원한다고 해도 거의 두 배에 이르는 남북한의 인구차로 인해 남한식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이 생각하는 통일과 교류의 방식은 북한이 수용하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와 상호의존의 확대 등 신자유주의적인 원리를 강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해서 선진국들의 새로운 국제레짐 구축과정에서 남한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복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흔히 선진국의 예를 들어 남한사회 민주주의의 얼룩진 부분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남한은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북한을 따라 오라고 너무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 함께 남북관계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을 '정권'과 '주민'의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즉 김정일정권은 비판하되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체제특성과 중앙집권도를 생각할 때 그 구분이 엄격하게 구분되거나 지켜지기 힘들다. 따라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차이를 지적하고 그것의 교정을 요구하는 것보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일 수 밖에 없다.

VII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1. 동맹이론과 남북관계
2. 패권이론으로 보는 미국
3. 주한미군과 통일·반통일 문제
4.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1. 동맹이론과 남북관계

힘없는 사람이 남으로부터 괘시를 받지 않거나 또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힘이 센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힘이 센 친구의 권세를 등에 업은 그는 남들로부터 함부로 대접받지 않을 것이고 특히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가 힘들어 진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경험하고 보아왔다. 힘이 센 친구의 권위와 영향력에 따라 양자의 관계는 보다 다양해진다.

그런데 부모자식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관계라는 것이 어디 한 쪽의 일방적인 수혜(受惠)가 가능한가.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약한 자는 힘센 친구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그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기가 힘들다. 또한 반대로 힘센 친구는 약한 친구에게 이런 저런 부탁이나 강제(強制)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국가간에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동맹’(alliance)이라고 부른다.⁴⁴⁾ 사람들이 서로 편을 짜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자국의 안보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간에 편짜기를 한다. 남한 역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50여년에 걸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한은 미국의 덕택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한편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남한에 역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단지 이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은 매우 유명하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논리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동맹은 “상황에 따라 그리 쉽게 변동하는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이다. 전자의 경우는 세력균형론자들의 주장이고 후

44) Walt의 정의에 따르면 동맹은 “두개 이상의 자주국가 간의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비공식적 협정”이다.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또한 영어로 동맹은 alliance 외에도 연합(coalition)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특히 Snyder는 연대(alignment)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G. Snyder, “Alliance, Balance, and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1991), pp. 121-142.

자는 세력우위론자들의 논리이다.

어떤 의미에서든 동맹이라는 것은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간에 안보적으로 상호이해(mutual interest)관계를 공유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함은 서로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동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동맹관계가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 동맹이 유지될 수는 없다. 더 많은 이익을 쫓아 쉽게 동맹을 바꾸지는 않지만, 해(害)가 되는 동맹을 유지할 나라는 없다.

동맹과 관련된 이론들 중에서 중요한 논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어느 한 국가가 전쟁에 돌입하려는 두 국가 중에서 한쪽 편을 드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또는 효용)이다. 즉 국가는 자신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 다시 말해서 동맹은 단지 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주관적인 선호와 이익을 고려한 선택의 결과이다.

둘째, 동맹은 힘이 대등한 국가간의 동맹과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동맹으로 나뉜다. 전자를 대칭적(symmetric) 동맹이라 하고 후자를 비대칭적(asymmetric) 동맹이라 한다. 대칭적 동맹이 순전히 안보적인 역할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비대칭적 동맹은 안보를 매개로 강대국과 약소국이 일종의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일컫는다. 즉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를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치권을 일정정도 포기하는 것이다. 그간의 한·미동맹은 이 부류에 속한다.

셋째, 동맹은 일반적으로 최소승자 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의 원칙에 따른다. 최소승자 연합이란 한쪽 동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우위를 선호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자국의 힘이 각각 10, 8, 3인 A, B, C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B(18)의 동맹이 아니라 B+C(11)의 동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18:3의 현저한 차이보다는 11:10의 근소한 차이가 나는 동맹이 맺어진다는 것이다.

넷째, 강대국이 약소국에 비해 동맹을 더 많이 맺고 따라서 더 많은 전쟁에 참여한다. 이는 우리가 이미 V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기대효용이론에 의한 것인데,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보다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작더라도 전

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올라감으로써 기대효용이 항상 양수(positive number, +)가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동맹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고 따라서 훨씬 많은 구체적이고 복잡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이상의 논리를 기준으로 하여 한반도에서의 동맹관계와 남북한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냉전시기에 있어 남북한은 이미 대규모의 전쟁을 경험한 바 있고, 따라서 안보동맹의 역할은 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우선 미국은 당연히 북한보다는 남한을 선호하고, 강대국인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남한의 편에서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 동맹관계는 비대칭적이다. 그런데 한·미 동맹은 북한에 대해 최소승자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으로 우월한 최대승자 동맹이라고 부를 만하다. 앞서의 수치를 인용해 보면, 11:10의 동맹관계가 아니라 18:3의 동맹관계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한·미동맹은 최근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견고하며 북한에 대해 우월하다. 현재 남북한의 국력을 비교해 볼 때 한·미 동맹은 승패의 차원을 벗어나 억지(deterrence)를 위한 의미가 더 크다. 그런데 한·미간의 비대칭적 관계는 종종 남한의 자치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남한과 미국의 대북한 시각 차(差)가 생길 경우 남한의 대북한 자율성은 미국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 상황에서 한·미관계(이른바 한미공조)와 북·미 관계의 진로는 따로 떨어져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의 자치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남한 내의 반미감정이 정당성을 갖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억지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강조된다. 이런 상반된 이해관계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에게 제조차도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남한에게 있어 한·미동맹은 국가자치의 확대와 안보 확실성의 담보라는 모순된 이해관계의 접점(接點)에 존재한다. 이는 한·미동맹이 본질적으로 갈등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남한의 경우 동맹의 주적(主敵)이 북한이라는 모순된 대상이다. 즉 한미동맹이 안보위협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현실적으로 '적' 이자 또한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남북한 관계는 이스라엘-아랍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적대적 아랍국들과의 관계에서 화해보다는 군사적 우위를 통한 현상유지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과의 화해를 도모하고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결국 남북한의 이러한 '특수관계'는 탈냉전과 함께 세월이 흘러오면서 한미동맹의 구조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오게 되었다. 특히 최근 상황은 북핵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동맹은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에 자치권의 일부를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주한미군에게 땅을 공여하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동맹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의 와중에서 대북 선제공격론이 제기되면서 안보불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고 화해를 도모하려는 남한의 의지와는 달리 미국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순기능에서 위기를 부르는 역기능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양상이 되었다. 동맹이 오히려 위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남한은 미국에 대해 강경노선의 선화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재의 북핵 위기상황이 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반복을 종속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남한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이 점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새로운 형태로 변모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일깨운다. 비록 남한이 원하지 않는 위기라 할지라도, 만의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군사적 표적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남한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한의 급속한 국력성장과 북한경제의 쇠락으로 인해 이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과 그 동맹국(미국)은 승리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전쟁

의 승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인명의 손실과 경제의 파탄일 뿐이다. 우리에게 전쟁은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인 따라서 피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동맹관계를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들이 느끼는 안보적 불안감을 쉽게 알 수 있다. 냉전이 끝나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군사동맹국을 잃었다. 여전히 양국과 군사조약을 맺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의 그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반면에 남한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여전히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북한의 최대 후원자였던 중국·러시아와도 친구로 지내고 있다. 더욱이 남한은 우월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비를 더욱 첨단화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연료값이 없어 비행훈련조차 제대로 못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위기 그 자체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미사일이고 핵무기일 수 있다. 그런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자꾸 북한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 자신들은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데, 아무런 보상과 안전보장 없이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실로 위기에 처한 그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그들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라도 상황을 바꾸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안보적으로 위기감을 덜 느끼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 경수로 제공, 북·미 미사일협상, 평화협정 전환, 북한과 미·일수교 등의 문제가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북한이 핵개발이라는 '원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악한 안보·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의 보상을 바란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복잡성이 시작된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풀어주는 방식은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거나 '단죄'하는 것인데 어느 한 가지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데는 부담이 따르는 것이 남한의 입장이다.

남한으로서는 주한미군문제 역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절반이나 지출하는 상황이면서도⁴⁵⁾, 즉 동맹의 방식이 비대칭적인 것에서 대칭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의 훼손은 과거와 별로

45) 2004년에 남한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6억 2200만 달러이다. 『2004 국방백서』, p.98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에 경로의존적인(path-dependent) 상황에 있다. 더욱이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동맹국인 미국에 의해 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동맹의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 문제는 너무나도 민감한 사안이라서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동맹의 크기가 너무 컸고 앞으로도 그 핵심적 역할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이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심도 있게 재고할 시점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변화'를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패권이론으로 보는 미국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이 있다.⁴⁶⁾ 역사학자인 케네디는 이 책에서 제목 그대로 강대국이 어떻게 흥(興)하고 망(亡)해 왔는지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인류사를 돌이켜 볼 때, 무한권력은 개인에게도 또한 국가에게도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한할 것 같은 당대의 상황과 구조는 끊임없이 변동해 왔다.

현재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선도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장담은 아무도 할 수 없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다가올 영국의 몰락을 앞서 본 선견지명이 거의 없었고, 또한 최근의 예로서 소련의 붕괴를 그 일년 전이라도 논리적으로 예측한 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에 대해 ‘장주기이론’(long cycle theory)과 ‘패권전쟁이론’(hegemonic war theory)을 통해 조망해 보기로 한다.⁴⁷⁾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덕목을 갖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실정치의 시각으로 볼 때, 최강의 국가가 되는 원동력은 경제력이다. 경제력을 토대로 막강한 군사력을 구비하고 이를 도구

로 하여 국제사회에 선도적인 정치력을 발휘할 때 그 국가가 최강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력의 원동력인 경제적 측면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을 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 1위의 기업이 경제적 제반조건에 따라 계속 자리바꿈을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최강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불변할 것 같은 미국의 현재 지위도 변화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16세기의 포르투갈, 17세기의 네덜란드, 18~19세기의 영국 역시 당시에는 그 쇠락을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강국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추월하는 도전국가들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전쟁 또는 양도를 통해 패권국가의 지위는 장기적으로 어떤 주기를 가지고 계속 변해온 것이다.

마치 한 사회에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반복하듯이 국제사회 역시 경기순환의 흐름을 갖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속하는 명제이다. 즉 강대국 또는 강대국군(群)이 지배하는 세계 경제체제의 효율성이 변화함에 따라, 그 강대국의 위상은 강화되기도 또는 도전받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경제체제의 효율과 강대국의 위상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모델스키(George Modelski)는 해군력을 중심으로 강대국의 위상을 기준 하는데, 기존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국제안보와 국제경제와 같은 전지구적 인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를 공급·유지하는 주체가 세계국가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세계국가는 미국이 틀림없다. 그런데 기존의 세계 체제는 세계국가와 여타 강대국들의 상호 역학관계에 의해서 규정되고 체제 변화를 겪게 된다.

간략하게 세계체제의 변화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세계국가의 등장이다. 기존의 세계체제가 낡고 안정되지 않아 기존의 세계국가와 그것을 대체하려는 도전국간의 세계전쟁이 일어난다. 이때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연합을 형성하게 된다. 도전국의 승리로 새로운 체제는 시작되고, 이 승리국은 다른 강대국과의 합의(조약 등)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

둘째, 당연시되던 세계국가의 정통성은 그 지도력에 대해 비판이 일게 되

46) 폴 케네디, 이일수 외 옮김, 『강대국의 흥망』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89).

47) 이하 논의되는 글의 이론적 배경은 George Modelski & Patrick Morgan, *op. cit.* 와 George Modelski & William R. Thompson, *op. cit.* 및 Robert Gilpin, *op. cit.* (1981)과 (1989) 참조.

고 비정통화(delegitimation) 된다. 이 시기에 새로운 도전국가가 등장하게 되며 잠재적인 세계국가의 위상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도전국은 여전히 기존 세계국가의 막강한 위상에는 범접할 수 없는 단지 잠재적인 도전국일 뿐이다.

셋째, 탈집중화(deconcentration)의 단계이다. 기존 세계국가는 이제 더 이상 국제체제의 질서·안정·안보를 원활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즉 체제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강대국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협조는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도전국의 위상은 점점 강화된다.

넷째, 세계전쟁의 단계이다. 그동안 힘을 비축해 온 도전국은 기존 세계국가의 지위를 스스로 대체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세계전쟁에서 승리한 도전국은 국제 위계질서의 꼭대기에 오르게 되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종합해 보면, 모델스키 등이 주장하는 장주기이론은 100~120년을 주기로 위의 과정을 반복하며 세계의 주인이 계속해서 뒤바뀐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는 기존 세계국가의 흥망성쇠와 도전국가의 이해관계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세계전쟁이 그 축으로서 작동한다. 다음에서 논의할 패권전쟁 이론과도 많은 유사성을 가지는데, 가장 큰 차별성은 국제행위자들의 역할보다는 어떤 주기를 가지고 세상이 크게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길핀(Robert Gilpin)의 패권전쟁 이론 역시 어떤 체제 내에서 최고의 위상을 가진 국가(패권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다른 강대국과의 필연적인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다만 어떤 시간적인 주기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변동하는 국력에 따라 패권국가의 위치가 안정적인 단계에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전되어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길핀에 따르면, 국가들은 체제변혁을 통한 기대이익(expected benefits)이 변혁의 과정(전쟁)에서 소요되는 기대비용(expected costs)보다 크다고 생각할 때 전쟁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패권국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현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체제지속을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그것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패권유지비가 증가함에 따라 패권에 따른 이익은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강대국들의 이익은 확산되어 패권국가의 상대적 지위를 잠식하게 된다. 아직 패권도전국의 위상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중국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이 패권유지를 위해 국제적 분쟁과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자원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은 가끔씩 미국의 행동에 대해 찬성이나 비판을 가하면서 그 과실(果實)을 공유하기만 하면 된다. 중국은 현재 기존의 체제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이 매달려 돈을 쓰는 일은 별로 없다. 중국은 아직 자체의 국력신장 외에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뿐더러, 따라서 이에 대한 외부의 압력도 별로 없다. 그래서 더욱 유리한 입장이다. 최근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아울러 중국이 미국 이후의 패권국가가 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들은 이러한 조건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패권전쟁이론에 따르면 국가들은 단지 체제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기적인 이해추구 과정에서 보다 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체제를 바꾸려 하는 것이고, 그 충돌이 전쟁이라는 외연(外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세계체제론을 주창한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도 길핀과 마찬가지로 패권의 단계적 변화에 따라 세계전쟁이 일어난다는 논리를 말하고 있다.⁴⁸⁾

위의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가 나온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는 대부분 선거라는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권력이 바뀌지만, 국제사회의 경우에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자연법칙이 국가들 간의 사회에도 통용된다는 점이 그다지 이채롭지는 않다. 그러나 고도로 정보통신이 발달된 현재의 국제사회가 이러한 주기적 굴레를 회피하지 못하고 또다시 큰 전쟁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

48) Immanuel Wallerstein,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i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16 (1974) 및 임마뉴엘 월러스타인 외, 정진역 편역, 『세계체제론』 (서울: 나남, 1995).

현재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Pax-Americana)'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굳히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미국의 영원한 독주(獨走)를 용인하지 않는다. 기존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힘과 의지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퇴할 것이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도전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미국이 펼치는 여러 오만하고 방자한 행동들은 양식 있는 세계의 지식인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0세기에는 주로 냉전이라는 특수상황을 근거로 많은 것이 용인될 수 있었으나, 21세기의 미국이 예전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국가들의 불만을 키우고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의 출현을 앞당기는 것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등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갈등은 순리(順理)에 따라 해결되어야지, 패권국의 이익을 위해 강압적으로 해소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를 기점으로 미국은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다시 한번 거세게 강화하고 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체제위협을 뿌리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현 세계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발로이다. 그동안 '눈에 가시'로 여기던 국가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군사행동을 가하거나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그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와 침공위협을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동안 애써 북한에게 취한 포용정책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강경책이 북한정권을 변화시키리라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는 대북 강경론에 동참하여 남북관계를 다시금 냉각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주장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남한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정치·군사적 동맹국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국가의 지위를 남용하여 한반도를 패권유지의 실험장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점에서 남한의 대북정책은 한·미공조의 중요성과 함께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와 정

책이 꾸준히 요구된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북정책은 장기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주변국과도 두터운 '컨센서스(consensus)'를 확보하는 일에도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국가의 흥망이 엇갈리고 패권이 바뀐다는 위의 이론을 수용할 경우, 미국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체제의 패권국이고 북한은 함께 어깨동무해야 할 한 민족임을 가끔씩 잊고 사는 게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3. 주한미군과 통일·반통일 문제

1980년대 이후 일부 대학생들을 축으로 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존재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부수적인 민·형사상의 문제와 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함에 대해 분노하는 경우다. 다음으로는 주한미군이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의 대립을 조장하는 핵심세력이라고 인식하는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하는 경우다. 물론 이 두 가지 생각은 서로 혼재되어 상황 변동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근대사에서 외세 특히 서양에 대한 우리민족의 저항역사는 개항을 둘러싸고 심한 거부감을 표실했던 흥선 대원군 시절로까지 거슬러 간다. 이후 해방과 함께 신탁통치를 둘러싼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친미 반공정부 하에서 직·간접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인 대부분은 미국을 고마운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냉전체제 하에서 소련과 중국을 억지하고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을 중요한 요충지로 여겼고 이에 따라 한국에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미국을 타도와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논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그에 대한 일반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과거 한국은 세계 최빈국으로서 강대국의 도움이 절실했고 그 후원자가 바로 미국이었다.

그러나 전두환이 중심이 된 군부쿠데타와 광주학살을 묵인하고 그들의 권력쟁취를 미국이 승인한 것은 민주화를 열망하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주었다. 이를 계기로 그들에게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힘 센 국가로 전락하였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 통제가 심했던 1985년 일단의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버린 채 서울의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미국에 대해 광주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 나아가 미국이 남북관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제도권 밖에서 불붙기 시작했다.

과거 소수 지식인들의 머리 속에만 있던 생각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과 민주화 운동세력으로 급격히 대중화 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고착되었던 반공주의적 역사의식에서 탈피해 미국과 한반도 분단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불법서적인 마르크스·레닌, 김일성의 저작들을 읽고 토론하는 이른바 ‘의식화’가 일반화되었다. 현재 386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바로 그 시절 이런 문화 속에서 대학을 다니고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다.

대학에 교련수업이 있던 그 시절, 분단현실을 대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학습시키려던 정부에 맞서 대학생들은 군사합숙훈련과 전방부대입소훈련을 ‘미국용병학습’이라며 격렬히 거부하곤 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상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민족의 통일과 민주화에 대해 토론하였다. 더욱이 5공화국 시절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자긍심을 높이는 상승효과를 일으켜 민족의 장래에 대해 스스로의 비전을 찾으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서적과 북한의 이념서적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국주의와 그 수탈국의 관계에 몰두하게 되었고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내리기에 이른다.

한국사회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시 운동세력 내에서 중요한 의제였다. 결국 ‘사회구성체론’으로까지 확대된 이 논쟁의 와중에서 민주화운동세력은 당시의 한국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보는 그룹과 식민지 반봉건자본주의로 인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사회인식 차이로 운동세력은 이른바

민중민주주의(PD) 계열과 민족해방(NL) 계열로 분파되었다. 이 시기 발족된 전국대학생대표자 회의회(전대협)의 의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지향점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즉 운동의 우선순위를 (한국의) 민주화 혹은 계급투쟁에 둘 것이냐 아니면 식민지해방을 통한 민족통일에 두느냐를 놓고 미묘한 인식차를 보였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당시 운동세력의 주도권은 NL계열이 차지했고 그 결과 통일운동이 강화되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보다는 외세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반발, 권위주의 쿠데타정부에 대한 저항감과 그들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위기감 그리고 통일에 대한 ‘순진한’ 접근으로 많은 부분에서 북한의 선동구호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격한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유행’ 했던 데모구호 중 하나가 “반미반제 양키 고 홈”이었다. 이는 “미제(미국제국주의)의 각을 뜨자”로 대표되는 북한의 반미구호와 일맥 상통하여 외형적으로 운동세력은 북한과 같은 위치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형세가 되었다. 또한 북한의 주체사상은 당시 그들의 지도이념이기도 했다.

그런데 1987년 6·10항쟁으로 얻은 민주화 성취와 소련의 붕괴로 맞이하게 된 탈냉전의 새로운 세상은 운동세력을 와해시켰고 운동세력의 전선(戰線)과 지향점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대다수 사람이 개인의 삶 속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반미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체들이 존재한다.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세력은 여전히 미군부대와 미군사격장에 무단 진입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의 반미감정과 운동은 2002년 당시 여중생이었던 효순이와 미선이의 장갑차사고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한미관계의 불평등, 북핵 위기에 대처하는 미국의 고압적 태도와 전쟁위기감 조성, 한·미통상 관계에서의 피해의식, 미국무기의 수입 강요 그리고 잠재되었던 민족주의 의식이 재현되어 복합적으로 외연화된 것이다. 또한 당시 이라크 파병을 강하게 ‘권유’한 미국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모습은 그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

적 정세와 세상의 변화를 대처해 나가는 데 주한미군의 철수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평화와 통일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국내외적 변수로 인해 혼란과 위기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장래는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 그리고 관련 주변국들이 외교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주한미군 철수가 평화 통일을 이끌고 민족의 경제적 장래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한국인 누구도 그들의 철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군의 주둔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장래가 그다지 장밋빛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이 갖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도 없다.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들이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상황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북한을 제외하고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는 국가가 없다. 즉 나름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의 존재에 익숙하고 그들이 빠진 공백에 대한 우려(불확실성)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없어도 북핵 위기는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북핵 위기의 중심에 꼭 주한미군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지금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더라도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은 그다지 큰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장래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들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고 또한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주국방의 틀을 짜고 외국군을 우리 땅에서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단초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다. 이는 마치 '자동차를 없애면 대기오염이 사라진다'와 같은 허망한 논리일 뿐이다. 미군철수는 '목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어야 한다.

4.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미군 감축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그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춰 국방체계를 변경·재정비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일환으로 주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주국방론이다. 그런데 자주국방의 원래 정의가 '일국의 안보를 자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라고 할 때,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그것과 다르다. 한국에는 여전히 약 2만5천명의 미군이 계속 주둔할 예정이며 한·미동맹 또한 계속 유지될 것이다.⁴⁹⁾ 동맹 안보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굳이 '자주국방'이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다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 또는 우려감에서 기인한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자주국방이란 불가능하다. 2003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국가안보 지킨다"라는 발표문에서 밝혔듯이, 한국이 지향하는 자주국방 계획은 정부차원에서는 일단 '협력적' 자주국방을 뜻한다.⁵⁰⁾ 이는 미군과의 군사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써 사전적 의미의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일단 감축이 예정된 1만2천여 명의 미군이 담당하던 역할을 우리 군이 떠안는다는 의미에서 '역할 확장'을 자주국방의 확대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우리 한국군이 그 역할을 대체하는가다. 감축되는 미군이 담당하던 역할을 그대로 맡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던 장비와 인력이 똑같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일부의 주장에서와 같이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⁵¹⁾

이런 식의 인식은 만약 주한미군 모두가 한국을 떠날 경우에는 자주국방을

49)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은 한미간 2008년까지 12,500명을 3단계로 감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150개 분야에 걸쳐 110억달러를 투자해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실,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미 연합전력" 「통일한국」, (2005년 3월호).

50)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광복절 경축사와 국군의 날 차사를 통해서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51) 2005년 5월 26일, 국방부는 '06~'1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찰·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해 자주적 전쟁능력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하고 부대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한국군의 독자적 한반도 방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주적 전쟁억제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54조원의 전력투자비가 투입되며, 20여개 신규사업에만 8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軍, 정찰·정밀타격 능력 확충에 주력」 「연합뉴스」, (2005년 5월 26일).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한다. 주지하듯이 주한미군의 감축은 전 세계적인 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라 실행되는 부분적인 사항이다. 즉 한국에서 미군의 전략과 역할의 변동은 예정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이 그동안 미군이 맡아오던 역할을 그대로 담당하기 위해 전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것이 아니다. 더욱이 미군의 이전비용 대부분을 대줘야 하는 입장에서 이전비용과 전력보강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따르기도 한다. 한국군의 전력보강은 주한미군의 변경되는 전략·전술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하며, 그럴 경우 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보강은 다른 관점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과거에 어떤 부대가 소총으로만 무장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일부가 진지를 이동하면서 인력을 감축하고 포병부대로 성격을 바꾸었다고 가정하자. 또한 군대의 전술이 포병부대 중심으로 바뀌어 소총부대는 별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이 경우 공백이 생긴 이전의 진지에 소총부대를 보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유사시 전투의 양상이 포격 중심의 전술이 이루어진다면 소총부대는 별다른 역할이 있을 수 없다. 단순한 비유지만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꼴이다. 미군은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 운용을 위해서 전략을 바꾸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우리는 미군이 폐기하는 전술에 의거한 부대를 보충하는 모양새다.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

‘자주국방’, 한국전쟁 이후 계속 주장해 온 명제이며 독립국가라면 스스로 갖추어야 할 최선의 조건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충분히 지키기 위해 경주한다면 상호간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뿐 ‘확실한’ 안보를 구축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맹이 필요하고 불가침 조약과 같은 약속이 필요한 것이다. 구조적으로 한국은 독자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현재의 국력으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존재한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중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최강국들의 틈에 끼어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대등한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실현하기 힘든 일이며 또한 효율적이지 않은 발상이다. 우리는 동맹관계 또는 지역안보와 같은 어떤 ‘틀’을 이용할 수 있는 일

정 수준의 힘을 가지는 것이 최선이다. 즉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보다는 최소 수준의 힘의 확보와 함께 강대국들의 관계 속에서 유연한 위치 설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우주의자거나 극단적 애국주의자들에게는 다소 비겁하게 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안보태세는 이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한국의 군사력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이미 확대되어 버렸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문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과의 대치상태를 잘 조정할 수 있느냐의 질문으로 회귀되어 버린다. 일부의 안보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현재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지 않다. 특히 그동안 한국군의 전력증강은 한미연합군의 전술·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연합 전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북한에 비해 ‘매우’ 우위에 있다.

물론 미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을 대비한다면 한국군의 전력은 보충되어야 할 곳이 적지 않다. 그동안 미군에 의지하던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보충도 필요하고 전술·전략의 조정도 필수적이다. 특히 정보력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미군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⁵²⁾ 이 분야의 장비는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구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용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국가이고 그러한 시스템을 전 지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자주국방계획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한미 군사동맹이 와해되지 않는 한 급격한 군비확장을 할 필요는 없다. 한·미 상호간의 연합전력상의 역할배분에 따라 정해진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면 된다. 문제는 한·미간의 동맹이 우리 입장과 다르게 변동되고, 경우에 따라서 미군이 한국에서 전면 철수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52) 국방부가 발표한 '06~10 국방중기계획'에는 한반도 전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위해 공중조기경보체계(AWACS), 장거리 정보장비, 고·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을 반영하고 있다. AWACS는 미국과 이스라엘 장비 중에서 2005년 중 선정하고, 고고도 UAV는 2008년부터 4대를 해외구매하고 중고도 UAV 4대는 내년부터 국내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쯤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2005년 5월 26일).

독자적인 역할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결국 한국군으로서는 한·미 동맹관계의 변동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 해마다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현금 분담비율과 함께 토지 무상공여 등을 생각한다면 현재 절반 이상의 비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⁵³⁾

이렇듯 비용을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안보서비스를 미군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즉 미군 주둔에 돈을 들이면서 중복되는 분야에 필요 이상의 독자성을 가지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 있어 자주국방이란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볼 때 불가능한 목표다. 또한 단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 어느 정도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 미군이 빠진 공백을 우리가 전부 메우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자주국방의 첫걸음은 한국안보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문제이다. 통일국가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라면 미국에 대해 보다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동맹관계 속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53) 2004년에 남한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6억2,200만달러에 달한다. 연구실, 앞의 글, 「통일한국」(2005년 3월호).

VIII

남북한 국력비교와 통일비용

1. 국력의 개념과 측정
2. 남북한 국력비교와 대북지원
3. 남북한 국력차이와 통일비용의 문제

1. 국력의 개념과 측정

국력 즉 국가의 힘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국제행위의 주체인 국가의 행위가 힘이 강한 국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약소국의 비애는 바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힘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힘은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국제회의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에서부터 운동경기에서 보이지 않게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가장 확실한 국력의 비교는 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력을 키우는 것은 국가의 제1목적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각자의 방법을 통해 국력을 측정해 보기 위한 시도를 했다. <표 2>는 대표적인 각 학자들의 국력 측정에 사용된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 외에도 어떤 학자는 결합적(synthetic) 요소와 사회·심리적 요소 그리고 자연적 요소가 상호 작용을 미치면서 한 국가의 국력으로 발현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⁵⁴⁾

<표 2> 각 학자별 국력 구성요소

Raymond Aron	Freerick H. Hartmann	Hans J. Morgenthau	A. F. K. Organski	U. S. Army War College
공 간	지리적 요소	지 리	지 리	지리적 요인
가능한 자원	경제적 요소	자연자원	자 원	경제적 요인
			경제발전	
	군사의 요소	군 비		군사적 요인
인 구	인구의 요소	인 구	인 구	
집단의 행동능력	역사적·심리적·사회적 요소	국민성		사회적 요인
		국민사기	국민사기	
	경제적·행정적 요소	정부의 질	정치발전	정치적 요인
		공업력		
		외교의 질		

자료: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이론의 체계』 (서울: 박영사, 1977), p. 195에서 발췌·정리한 것임.

54) Steven J. Rosen & Walter S. Jones,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Inc., 1977), pp. 184-193.

흔히 사용되는 힘(power)이라는 용어를 정치학에서 개념화 하면 매우 까다로운 용어가 된다. 국제정치학에서 사용되는 힘에 관한 모든 주장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힘은 일국이 타국에 대하여 실행하는 영향력 또는 통제력이다. 힘은 국가가 타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경쟁에서 사용하는 수단과 추구하는 목표 양자를 의미한다. 국가의 모든 행위가 힘의 고려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은 항상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 깊게 연루되며 국가는 힘의 증강에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은 외교정책을 실행, 통제 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심리적 관계와도 관련된다.”⁵⁵⁾

위의 정의에서도 언급되지만 국력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어떻게 국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가? 복잡하게 정의되어 오히려 어렵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남한과 미국 중에 어느 나라의 국력이 더 강한지를 생각해 보자. 당연히 미국의 국력이 남한의 그것보다 월등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남한은 싱가포르에 비해 국력이 강한 것인가? 멕시코와 남한의 비교는 어떠한가? 미국과 남한의 경우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이 후자의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다. 왜 그런가? 그것은 국력을 비교하는 우리의 기준이 획일적이거나 단순하지 않고, 또 국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과 남한의 경우를 알아보자. 미국 인구는 남한보다 많다. 경제력도 우월하고 군사력도 월등하다. 국가면적 또한 비교가 안될 만큼 광대하다. 지하자원도 많다. 이렇게 우열이 확연할 경우 우리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력이 우월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과 오판이 나타나고 외교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난다.

위에서 예를 든 국가들을 이용하여 국력을 비교해 보자. 남한과 싱가포르는 누가 더 강한가? 양국 모두 ‘아시아의 용들’이라고 불리지면서 최근 2~30여 년 동안에 경제성장이 두드러졌던 국가들이다.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싱가포르가 앞서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남한이 월등하다. 인구, 국민총소득, 군사력, 국토면적 등에서 남한은 싱가포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 다음으로 남한과 멕시코를 비교해 보자. 양국의 국민총생산은 거의 비슷하지만 멕시코의 인구가 남한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이 월등히 높다. 그러나 국토면적에서는 멕시코가 앞선다.⁵⁶⁾ 다른 경우는 비슷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과연 누가 국력이 더 강한가? 두 나라가 맞붙어서 싸워본 적도 없고 더욱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양국의 국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위의 예를 통해 우리는 국력이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그것은 어떤 고정적이고 평면적인 비교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 간의 상대적인 우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국력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국가들의 힘을 비교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다. 이는 국가와 힘을 분석단위로 하는 현실주의의 이론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예를 들어 세력균형이론에서는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균형을 위해서는 힘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생긴다. 즉 A, B, C, D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할 때, 세력균형을 이루려면 각국은 국력의 변동에 따라 동맹관계를 계속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결국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그것을 ‘과학화’ 시키자는 것이 국력을 분석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현실의 세계에서 동맹은 힘의 크기에 대한 객관적 수치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세력우위이론에 따르면 마치 인간사회의 친구관계처럼 어느 한 쪽이 좀 손해를 보아도 계속 유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관계에도 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역사적 유대 등 다른 이해관

56) 최근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은 5,746억달러이고 멕시코는 6,370억달러이다. IBRD,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계의 공간이 생긴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은 이미 국력의 비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격차가 확대되어 있다.⁵⁷⁾ 그런데 최강국 미국과 남한은 동맹관계에 있고 북한은 기존의 동맹관계가 많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세력 균형이론이 개입할 소지가 없다.

다시 국력 자체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자. 국력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표 2>에서와 같이 경제력, 군사력, 인구, 국토, 천연자원, 정치체제, 외교력, 국민사기, 국민성 등의 지표를 종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국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전략을 짜기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여러 가지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국민사기나 국민성 등을 수치화하는 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또한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종합된 국력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 분석에 있어서 상대성(relative-ness)을 강조하고 아울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경제력과 국가(정부)의 능력을 곱한 것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다. 경제력은 주로 국민총생산(GNP, GDP, GNI 등)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정부)의 능력(capacity of government)은 국가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총생산을 통한 지표의 추출은 이해가 쉬우나 인적·물적자원을 통해 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정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는 그 정부가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가에 달린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경제력에 기반 한 국력비교는 대부분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들어맞는다. 경제력만을 비교할 때 각국의 국력변동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상대적인 높낮이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선과 인구성장률을 놓고 비교할 때 중국은 2020년쯤에 미국의 ‘국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가 중국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에서 비롯된다.

신생국의 국력은 인적 자원이 보다 중요하지만, 일단 체제를 갖추고 나면

57)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21.9억 달러(약 184조원)이고 남한의 GNI는 722.4억 달러(약 6,061조원)로 약 33배의 차이가 난다. VIII장 2절의 <표 3> 참조.

물적 자원에 대한 추출(extraction)이 국력증강의 토대가 된다. 물적 자원의 추출은 세입(taxation)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경제력으로부터 정부는 세금을 거둬 국민들이 원하는 비율로 재정을 구성한다. 비록 이것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명목상 현대국가들은 국민들의 의사를 재정구성에 반영한다. 그것을 수행하는 자들을 선거를 통해 뽑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는다면 그 국가는 국방예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외부로부터 위협이 없다면 주로 국민들의 복지와 교육에 많은 재정을 지출할 것이다. 합리적 국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면서 예산을 분배할 것이고 따라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는 국가차원의 힘을 합리적으로 기르게 된다.

한 국가에서 제도경제가 아닌 지하경제(암시장)가 활성화되면 정부의 세입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 그런 국가는 대부분 불안정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또한 국가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고 또는 국외로 이주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을 내리거나 또는 다음 선거에서 교체될 것이다. 이런 식의 국력분석을 통해 이데올로기가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국력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즉 남북한의 정치체제를 비교할 때 북한이 권위주의 독재체제이고 남한이 민주주의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남한이 우월하다고 보는 ‘유치함’을 벗어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경제수준이 높고 인구가 많을수록 국가는 가용할 예산으로 국방력 증강이든 과학발전이든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어느 항목에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각국이 스스로 합리적인 길을 택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 남북한 국력비교와 대북지원

1절에서의 국력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국력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경제력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표 4>의 내용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남한의 경제력은 2004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32.8배, 1인당 국민소득은 15.5배, 거기에 경제 성장률도 2배 정도 높다.

또한 무역 총량에 있어서 167.2배로 산업부존자원이 부족한 한반도 경제의 특성상 남한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상황임에 틀림없다.

〈표 3〉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인구								
북한(A)	천명	21,942	22,082	22,175	22,253	22,369	22,522	22,709
남한(B)	천명	46,287	46,617	47,008	47,343	47,640	47,925	48,082
(B/A)	배	2.1	2.1	2.1	2.1	2.1	2.1	2.1
2. 명목GNI								
북한(A)	조원 (억달러)	17.6 (126)	18.7 (158)	19.0 (168)	20.3 (157)	21.3 (170)	21.9 (184)	23.8 (208)
남한(B)	조원 (억달러)	476.2 (3,404)	523.4 (4,400)	576.2 (5,096)	621.0 (4,811)	685.1 (5,475)	722.4 (6,061)	779.5 (6,810)
(B/A)	배	27.1	27.9	30.4	30.6	32.1	32.9	32.8
3. 1인당GNI								
북한(A)	만원 (달러)	80.2 (573)	84.9 (714)	85.6 (757)	91.2 (706)	95.4 (762)	97.4 (818)	104.7 (914)
남한(B)	만원 (달러)	1,029 (7,355)	1,123 (9,438)	1,226 (10,841)	1,312 (10,162)	1,438 (11,493)	1,507 (12,646)	1,621 (14,162)
(B/A)	배	12.8	13.2	14.3	14.4	15.1	15.5	15.5
4. 경제성장률								
북한(A)	%	- 1.1	6.2	1.3	3.7	1.2	1.8	2.2
남한(B)	%	- 6.9	9.5	8.5	3.8	7.0	3.1	4.6
5. 대외경제								
무역총액								
북한(A)	억달러	14.4	14.8	19.7	22.7	22.6	23.9	28.6
남한(B)	억달러	2,255.9	2,634.4	3,327.5	2,915.4	3,146.0	3,726.4	4,783.0
(B/A)	배	156.7	178.0	168.9	128.4	139.2	155.9	167.2
〈수출〉								
북한(A)	억달러	5.6	5.1	5.6	6.5	7.4	7.8	10.2
남한(B)	억달러	1,323.1	1,436.9	1,722.7	1,544	1,624.7	1,938.2	2,538.4
(B/A)	배	236.3	281.7	307.6	231.4	219.6	248.5	248.9
〈수입〉								
북한(A)	억달러	8.8	9.6	14.1	16.2	15.2	16.1	18.4
남한(B)	억달러	932.8	1,197.5	1,604.8	1,411.0	1,521.3	1,788.3	2,244.6
(B/A)	배	106.0	124.7	113.8	87.1	100.1	111.1	122.0
대미환율								
북한(A)	원/달러	2.20	2.17	2.19	2.21	2.21(1~6)	145	139
남한(B)	원/달러	1,398.88	1,189.48	1,130.61	1,290.83	1,251.24	1,191.89	1,144.67
6. 예산규모								
북한(A)	억달러	91	92	96	98	N.A	N.A	25.1
남한(B)	억달러	523	677	774	768	876	991	1,034.0
(B/A)	배	5.7	7.4	8.1	7.8	N.A	N.A	N.A

자료: 한국은행(www.bok.or.kr)의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비교"에서 발췌·정리한 것임.

〈표 4〉 남북한 주요 산업능력 비교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에너지산업								
석탄생산량								
북한(A)	만ton	1,860	2,120	2,250	2,310	2,190	2,230	2,280
남한(B)	만ton	436	420	415	382	332	330	319
(B/A)	배	0.2	0.2	0.2	0.2	0.2	0.15	0.14
발전량								
북한(A)	만kwh	170	186	194	202	190	196	206
남한(B)	만kwh	2,153	2,393	2,664	2,852	3,065	3,224	3,421
(B/A)	배	12.7	12.9	13.7	14.1	16.1	16.4	16.6
원유도입량								
북한(A)	만배럴	369	233	285	424	438	420.7	390
남한(B)	만배럴	81,909	87,409	89,394	85,937	79,099	80,481	82,579
(B/A)	배	221.7	376.0	313.6	202.5	180.8	191.3	211.7
2. 농수산물생산량								
곡물								
북한(A)	만ton	388.6	422.2	359.0	394.6	413	425.2	431.2
남한(B)	만ton	575.9	600.0	591.1	620.0	559.6	500.4	566.9
(B/A)	배	1.5	1.4	1.6	1.6	1.4	1.2	1.3
쌀								
북한(A)	만ton	146.1	162.9	142.4	168.0	173.0	172.0	180.0
남한(B)	만ton	509.7	526.3	529.1	551.5	492.7	445.1	500.0
(B/A)	배	3.5	3.2	3.7	3.3	2.8	2.6	2.8
수산물								
북한(A)	만ton	62.7	66.4	69.8	74.6	80.5	83.5	116.9
남한(B)	만ton	283.5	291.1	251.4	266.5	247.6	248.7	251.9
(B/A)	배	4.5	4.4	3.6	3.6	3.1	3.0	2.2
3. 광산물생산량								
철광석								
북한(A)	만ton	289.0	378.6	379.3	420.8	407.8	443.3	457.9
남한(B)	만ton	23.8	18.8	16.3	2.3	15.7	17.4	22.6
(B/A)	배	0.08	0.05	0.04	0.01	0.04	0.04	0.05
비철금속								
북한(A)	만ton	9.7	11.1	9.6	9.2	8.7	9.4	9.8
남한(B)	만ton	90.6	101.4	111.5	114.0	127.3	137.9	150.9
(B/A)	배	9.3	9.1	11.6	12.4	14.6	14.7	15.4
4. 사회간접자본								
철도총연장								
북한(A)	km	5,214	5,214	5,214	5,224	5,235	5,235	5,235
남한(B)	km	3,125	3,119	3,123	3,125	3,129	3,140	3,380
(B/A)	배	0.6	0.6	0.6	0.6	0.6	0.6	0.6
도로총연장								
북한(A)	km	23,407	23,479	23,633	23,963	24,449	24,879	25,185
남한(B)	km	86,990	87,534	88,775	91,396	96,037	97,252	100,278
(B/A)	배	3.7	3.7	3.8	3.8	3.9	3.9	4.0
항만하역능력								
북한(A)	만ton	3,501	3,501	3,550	3,550	3,550	3,550	3,690
남한(B)	만ton	41,625	41,756	43,044	46,959	48,651	51,009	53,278
(B/A)	배	11.9	11.9	12.1	13.2	13.7	14.4	14.4

자료: 한국은행(www.bok.or.kr)의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비교"에서 발췌·정리한 것임.

다음으로 남북한 정부의 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남한의 경우, 주지하듯이 세금은 올라갈 줄만 알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외환위기를 맞아 곤경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히 경제력이 증가하여왔다. 국민총생산이 증가하고 또한 세율이 올라가면 국가의 세입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정부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지표이고, 남한정부가 목표세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남한정부의 능력은 그 동안 경제력의 성장과 함께 커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주지하듯이 북한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빈곤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연속되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극심한 경제부진과 홍수로 인해 기근까지 경험했다. 또한 계획경제체제의 근간인 배급체제가 이완되면서 암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정부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암시장의 확대로 세수를 늘리지도 못한다. 암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쇠락을 보충할 수는 있어도 정부의 능력이 강화되지는 않는 것이다. 북한은 생산과 배급의 차액으로부터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배급이 낮아졌음으로 국가재정이 상승할 여지가 있으나 그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생산이 계획의 틀을 벗어난 것에서 비롯되었기에 별 의미가 없다.⁵⁸⁾ 즉 북한정부는 외형적인 ‘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도’와 상관없이 정부의 능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력 X 정부의 질 = 국력’이라는 공식을 남북한에 대입할 때, 양자의 국력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어떤 이론을 대입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한이며 또한 잠재적인 안보위협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크게 느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이 2001년 9·11테러 이후 대테러전쟁을 선포한 이후 북한이 느낄 위기감은 더욱 커졌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실제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58)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후로 하여 북한에서 배급제는 점차로 축소되고 있다. 특히 최후까지 지탱되던 식량배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장가격이 시장가격으로 인상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북한의 생산·배급과제에 관한 논의는 최수영,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통일연구원 2005 개원 기념 학술회의 북한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2005년 4월 7일)의 발표문 참조.

긴장감을 바짝 더 높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다.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주장과 행동들이 줄을 잇는데도 공식적으로는 주적(主敵)이라는 개념이 포기되기 힘든 상황이다.⁵⁹⁾

어느 국제 정치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남북관계를 특수한 범주에 놓고 보는 경우는 없다. 일반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주 실례로 다뤄지는 것을 보면 남북관계 역시 일반 이론의 틀 내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이론의 보편성에서 볼 때, 남북관계도 이론적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어떤 현실이 이론과의 괴리를 확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기이다. 왜곡된 현실 속에서는 객관적인 실체가 잘 안 보일 수 있다. 우리들 마음 속에 들어 있는 잘못된 인식과 허상을 없애기 전에는 북한은 흉폭하고 위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무조건 북한을 겁내기에는 우리의 국력이 너무나도 크다. 여유 있는 자의 미덕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한 그에 합당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식량난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핵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당면과제 앞에서 대북지원은 항상 논란거리가 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와 지원품이 군부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핵개발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전략적 사고가 상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과 ‘전략적 압박’의 대치국면은 대북지원의 경험이 1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⁶⁰⁾

북한당국이 핵문제에 대해 유연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체제수호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남한사회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초적 원인이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모든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적성(敵性)국가에 대한 모든 지원은 이적(利敵)행위가 된다. 특수한 상황에 특별한 지원은 때로는 적성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59) 많은 논란 끝에 ‘2004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개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적 논의는 종료되지 않고 있다.

60) 남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1995년 북한의 7급지원 요청 이후 추진되었다. 김근식 외, 『통일·남북관계 사전』(서울 통일교육원, 2004), p.197.

하는 것이며 또한 외교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압박과 화해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⁶¹⁾

직접적인 교전상태가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적국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 상호간의 적대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국에 이익을 줄 수 있다. 냉전시기 미국의 소련에 대한 원조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군비경쟁과 스파이전 등으로 항상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만성적인 소련의 식량난에 대해 미국은 식량을 지원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소련의 군비증강에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미국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발표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현재 남북한은 북핵 위기의 미결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서 나름대로 지속적인 협력을 해오고 있다. 또한 각종 민간단체에 의한 의료품·식료품 지원이 있고 정부에 의한 비료지원도 거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의 대북지원은 김영삼정부 시절 전격적인 쌀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동맹국보다 민족이 우선’ 한다는 입장에 따라 당시 남한정부는 식량난에 처한 동족을 돕기 위해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북지원에 대해 국민들과의 사전 합의과정 없이었고 또한 식량수송선에 대한 북한의 태극기 강하사건(1995년 6월 ‘씨 아팩스호’ 사건), 잠수함 침투사건(1996년 9월 강릉침투사건), 서해교전(2002년 6월) 등으로 상황은 ‘쌀을 주고 총부리를 맞는’ 외형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이후 대북지원에 대한 신중론 또는 반대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북한 핵개발과 맞물려 ‘대북 퍼주기’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김대중정부 이래 야당의 대북정책 공세의 축은 ‘퍼주기론’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기운이 감돈 시기는 잠시이고 회담당사를 위한 현금지원·뒷거래 등이 알려지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되었다. 때때로 보도되는 북한군의 전진배치와 아직도 진행 중인 핵개발 상황은 이러한 회의론과 맞물려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비증강 나아가 핵개발에 이용된다는 논리의 ‘설득력’을 높인 바 있다.

61) 세계적인 핵확산방지의 주 담당국인 미국의 학자들은 새로운 핵보유국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외교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을 함께 고려하면서 장단점을 지적한다. 특히 외교적 수단에서는 보상을 해 주는 문제까지 제시된다. 로버트 D. 블랙웰, 알버트 카나세일 (편), 김일수·이정우(옮김), 앞의 책 제2부와 제3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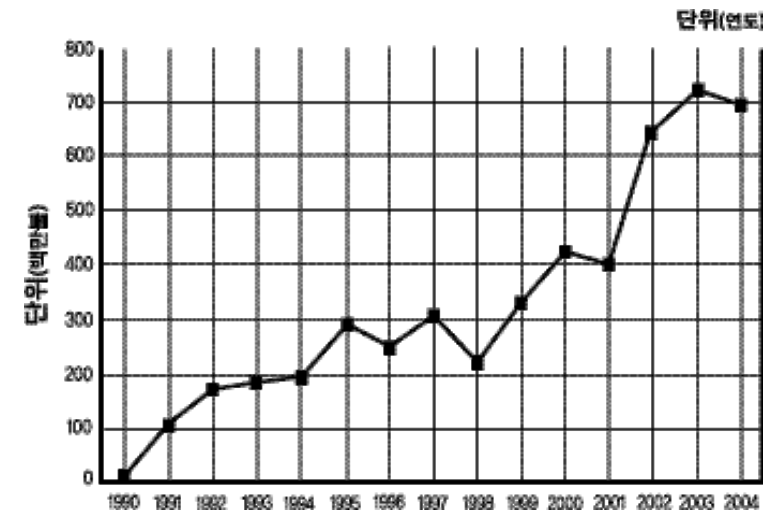
〈표 5〉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단위 : 백만불)

연 도	’90	’91	’92	’93	’94	’95	’96
총교역액	13	111	173	187	195	287	252
	’97	’98	’99	’00	’01	’02	’03
	308	222	333	425	403	642	724
							’04
							697

자료 : <http://www.unikorea.go.kr>

〈그림 11〉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자료 : <http://www.unikorea.go.kr>

전쟁에 대한 공포와 끊이지 않는 북한의 핵개발 상황이 남한으로 하여금 대북지원의 당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퍼주기론’의 등장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과 화해·협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한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지원을 펼쳐야 할 상황에 존재한다.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고 그것이 신뢰의 바탕이 된다. 현재 북한이 원하는 것은 식량(비료)과 전력과 달러이다.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의 기대치만큼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폐주기론'은 그 생명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지원(또는 경제협력)에 회의를 가지는 남한의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지원을 한다'는 푸념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남한정부의 대북 태도가 '이끌려 가고 실속도 못 차리는' 것으로 비춰진다.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데 남한은 어정쩡한 태도로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대북지원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폐주기'는 좀 지나친 표현 방식이다. 더욱이 식량지원이 핵개발에 사용되므로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면 전략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측면이 더 강해진다.

또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방지전략과 우리의 대북정책이 동일할 수 없다. 북한이 동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껴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정이기도 하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부패한 권력과 깡패 등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식량을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채운 사실을 알고 있다. 부패한 권력에는 부패한 행동이 따르기 마련이다. 국제사회가 원조를 끊는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사회 지배구조의 말단에 있는 주민들이다. 지금 북한이 그와 같다고 추측할 수 있다. 지원되는 식량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불균등' 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한 식량이 공급될 때 그 정보를 독점하는 권력기관들이 자신들의 우선권을 담당기관에 요청할 것이고 권력의 크기에 따라 배분될 개연성은 상존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부는 주요 권력기관이며 현재 북한은 선군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에 식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될 가능성은 예측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배급이 불규칙하고 상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조달에 한계를 느낀 군이 미래를 대비해 비축을 시도하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당국이 아무리 규제하려고 해도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기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식량의 불공정 배급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면 그것은 북한주민들을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지원을 더욱 늘리고 지속화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나름의 분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안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권력의 부패구조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배분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보다 강화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가 지원한 쌀이 총탄 되어 돌아온다"는 선정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국내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돕는 것은 부패한 북한 권력구조가 아니라 굶주림에 죽어가는 북한의 아이들과 일반 주민들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북한군도 먹여야 하고 어느 정도 중간의 유출도 감수해야 한다. 군대를 굶기면서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하는 정치체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 부패하다고 아예 의회정치를 부정할 수 없듯이 북한의 부패구조가 밍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 다만 분배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정된 공급 속에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식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3. 남북한 국력차이와 통일비용의 문제

한국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 독일통일을 경험하면서부터다. 주지하듯이 당시는 사회주의권 해체로 인해 북한붕괴론이 대두되면서 독일식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또는 우려)가 왕성하던 시기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통일에서 이른바 통일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독일 통일비용은 당초 1조 DM(당시 환율로 약 5백조원) 정도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 2배에 해당하는 2조DM이상 들어갔다.

당시 독일의 통일비용에 대해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추산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 3,100억DM, 전자통신 550억DM, 동서독 퇴역

군인 비용 1백억DM, 소련군 철수비용 1차분 130억DM, 동독기업 현대화 보조금 90억DM, 베르린 수도이전비 6백억DM, 동독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매년 1천억DM 등 각종 비용을 합하면 1조DM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산은 단지 독일통일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기간이 경과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커진 수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민간경제의 투자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면 2조DM도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

독일 통일비용의 천문학적 수치를 보면서 우리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자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각 연구자의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과 기준 설정 차이로 통일비용에 대한 예측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통합 이후 피통합측의 경제수준을 통합 측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된다.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는 통일비용 개념을 “통일되기 몇달 전 동독정부와 맺은 ‘경제·통화·사회동맹’ 조약이 발효된 후(1990년 7월) 10년 내에 동독지역이 서독지역의 경제력 및 소득수준의 일정비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라고 인식했다.

우리의 통일비용 개념도 독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요 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실업보상과 고용대책, 노후화된 산업시설의 교체와 신규 시설투자, 주택보수, 북한외채 부담 등으로 그 추정액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문학적 수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은 이때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일비용은 연구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500억달러에서 1조3,200억달러까지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통일비용 추정연구 결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는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국내 전문가, 해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계산되어졌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KDI)측은 재정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포함해 850억~2,400억달러(약 102조~288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김대중정부의 ‘21세기위원회’는 ‘21세기의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 보조, 민간기업의 투자까지 합쳐 4,400억~1조2천억달러로 추산했다. 양자 모두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의 적용이 다른 이유로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⁶²⁾

이 밖에 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는 2,280억달러, 통일연구원은 4,482억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조정기간을 12년으로 잡고 있는 신창민 중앙대 교수는 최대 1조3,2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황의각 고려대 교수는 1996년 당시 “200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때 남북한간 1인당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1조2,040억 달러가 필요하고 여기에 정치·사회·심리적 비용을 포함한다면 전체 통일비용은 2조5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황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구조, 재산권, 기업경영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간, 산업부문간, 사회계층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이를 통해 남북한간 분업체계가 이루어져 통일비용은 사회통합과정에서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박사의 예측은 매우 비판적이다. 1996년에 발표된 그의 논문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계산 : 비판적 시각」에 따르면 “2000년에 통일이 될 경우 10년간 북한에 1조5천억달러를 집중 투자해도 25년이 지나야 한국의 60%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그와는 달리 일본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는 매우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종합연구소는 북한 경제규모가 동독의 1/4에 해당하는 것을 주목하여 비용도 독일 통일비용의 1/4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통일 후 10년 동안 2천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영국 경제전문가정보단(EIU)은 1,500억~2,600억달러, 미국 시사주간지<타임>은 3천억달러 그리고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3천억~4천억달러가 통일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98년 <경제협력과 통일비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을 남한 수준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최적 투자 총액을 2,808억달러

62) 통일비용에 대한 수치적 계산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편, 『통일·북한 핸드북』(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7), pp. 452~457 참조.

로 산정한 바 있다.

이렇듯 수천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보노라면 통일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비용의 부담은 분단비용의 소멸과 함께 일어난다는 점이다. 분단을 위해 들이는 사회적 비용은 비단 군사비의 차원이 아니라 이산가족의 문제, 이념대립의 문제, 정치비용의 문제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은 투입되는 비용만 생각하고 회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치 않았다. 예를 들어 대륙으로의 길이 봉쇄된 현재 상황에서 통일 후 철도와 도로를 설치하고 개선하는 사업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보면 투자된 비용은 단지 손실이 아니다.

대륙으로의 육로가 열리게 되면 유라시아 대륙과의 무역과 교통에 있어서 물류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시베리아 가스관 설치 등도 현실적인 사업이 된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영화에서만 보던 자가용을 탄 채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환경변화는 여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듯 투자비용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손실이 아니듯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모두 손실로 산정될 수는 없다.

물론 통일비용의 엄청난 액수는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우려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로 인해 더 못살게 되었다든지 후진국이 되지 않았듯이 우리도 현명하게 통일을 맞이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특히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을 상정한다면 흡수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 될 수도 있다.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면 줄일수록 통일비용은 적어지게 된다. 2004년 4월 1일 개통된 고속철도를 완성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되었지만 그 경제적 파생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은 별로 없다.

통일도 마찬가지다. 통일의 경우 나타날 수많은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을 생각하면 독일과의 단순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통일은 우리에게 십나

라에서 진정한 반도국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통일비용의 총액에 대한 우려 보다는 한정된 자원과 투자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장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IX

결론

이론이라는 것이 그 생명력과 적실성(validity)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수학문제와 달리 많은 예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며, 사람들은 하나의 정답을 전적으로 옳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외적인 현실을 이론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많은 경우 그것이 일반인들을 이론과 멀어지게 만든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사회현상을 모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논리가 중요시되는 것은 그것이 사회변화를 설명하고 또한 사회변화를 위한 행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들과 우리가 속한 사회가 행동하고 반응하는 대부분의 중요행위들은 이미 이론에 의해서 규명이 되어지고 있다. 알고 행동하든 모르고 하든 우리는 이론과 적합한 행동을 하고 있다.

기존의 체제와 인식을 바꾸려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일상의 정치에서 또는 사회적 변혁의 시기에 국가와 정치인들은 그들의 논리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고집하기도 한다. 기존의 일반적 사회행위와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이쪽으로 가자고 말하거나 강제한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험에서 볼 때, 새마을운동·유신·통일정책·정의사회구현 등의 굵직굵직한 것들에서부터 재벌규제·의료보험·조세 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변화에는 논리가 동원된다.

종합해 보면, 논리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현실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한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발판이기도 하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학교에서 배운 공부가 사회에서 별로 효용이 없고 오히려 현실사회의 경험이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도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이론은 대부분 현실의 변화를 바탕으로 후차적으로 발생한다. 자연과학의 경우, 뉴턴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대과학자가 발견한 것도 실은 다 원래 그러한 자연적 현상을 최초로 설명한 것일 뿐이다. 우리가 첨단문명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모두 원래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것들을 조합하여 이루어 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론은 본질적으로 현실에 앞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우리

가 이미 습득한 이론과 논리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현실의 세계와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사람의 생각이 변화하듯이 이론과 논리 역시 발전을 거듭하며 내부적으로 정교해진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학자들은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이들 상호간의 논쟁을 통해서 학파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한 이론의 정교함은 더욱 치밀해진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지동설(地動說)도 과거에는 천동설(天動說)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자리를 잡은 이론이다. 지동설의 승리가 확정되기 전에는 양자간에 엄청난 공방과 논쟁이 있었으며 때로는 의견차이로 감옥에 가거나 죽기도 하였다. 하나의 이론이 확정되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 전에 우리는 기존의 질서에 융합하는 '낯은' 이론을 배우게 되고 그것은 현실과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이론적 정당성이 꼭 현실과 부합하지는 않는다. 각기 다른 생각과 물질(物的)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장(場)이 사회이다. 따라서 그곳에는 항상 상호간의 이익과 생각이 대립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인원감축이 필요하지만, 노동자는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투쟁하게 된다. 경영학의 논리를 따르자면 효율을 위한 감축이 맞고,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된다. 우리는 어느 하나를 전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론은 현실세계에서 상호 모순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론과 현실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채로, 이제 남북한 문제와 이론(논리)과의 관계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남북한문제는 실험실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은 계속 변화하고 이를 설명할 이론도 계속 진화한다. 이런 이유로 변화하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북한의 관계를 과거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우둔한 방식이다. 경험적 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박정희 정부의 남한이 지금 노무현 정부의 남한과 질적으로 같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한국전쟁 때의 북한과 김정일의 북한이 동일한 존재일 수는 없다.

개인에게 있어 이론은 시각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

게 하는 기능을 한다. 현실이 변하는데 이론은 변화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과거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근무태만이며 어떤 정치적 의도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비록 부자세습의 한계에 놓여 있지만, 북한정권은 '변화' 하였고 또한 과거의 세계적 냉전이 해체되어 한반도의 내부적, 국제적 조건은 과거와 같지 않다. 현실은 변했는데 아직도 과거의 틀로 세상을 인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둘째, 다행스럽게도 남한의 관련 학자들이 근무에 태만하지 않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각(논리)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 여러 이론적 시도들은 학자들 간의 논쟁을 통해 또는 진실의 발굴에 의해 보다 견고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만 현실을 이해하려는 논리들이 일부의 학자들과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여전히 새로운 논리와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개의 상반된 논리가 병존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어느 한 쪽이 완벽한 승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사회에서는 여전히 북한정권에 대한 다소 호의적인 표현이 큰 물의를 일으키곤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힘들어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에 있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택하고 있다. '빨갱이'라는 낙인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을 정치·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 즉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논리와 현재의 '진보적' 논리가 여전히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 관계는 모순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혁신적 이론이 그것을 모두 설명하고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이 역사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모두 똑같을 수는 없다. 한국전쟁으로 '인민군'에게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 북한에 대응하는 사고와 행동이 어떻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겠는가?

보다 근본적인 안보적 관점에서는 가상적인 적으로서의 북한과 통일대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이중적 존재는 풀리지 않는 난해한 방정식일 수 있다. 또한 방정식의 조건인 북한의 태도와 주변강국들의 대한반도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하여 간다. 남한이 단독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답을 찾기 위해 남한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주변강국들과 공

조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가 않다. 외부요인과 각 주체들의 생각이 상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1세기 남한사회, 21세기 새로운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후진적인 시위의 남발, 갈등과 대립 또한 이러한 현상만을 확대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가 다시금 대립을 확산하는 소모적 논쟁의 반복은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대립과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교양 있는 나라에서 살 권리를 주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얼마든지 유통하되, 상반된 논리의 저급한 충돌은 그만 끝내야 한다.

각각의 주장은 대부분 스스로의 논리를 가진다. 근거가 있고 주장을 도출케 하는 사실(fact)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 논리의 두 사람 모두 언뜻 일관성을 가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의 확실성(또는 모호성)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 속에 왜곡된 근거, 잘못된 사실 등이 인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외적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일반화하거나 반대로 특수한 상황을 핑계로 일반적 진실을 외면하는 전략은 자기이익과 만족을 위한 것일 뿐 사회를 위한 주장이 될 수 없다. 개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각자의 선호에 따라 다른 디자인과 색상의 옷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역지를 부려가며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거나 자신만의 논리가 진리라고 외치는 돌격대적 사고는 사이버 종교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사상의 자유는 존중하되 그 표현양식은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각자의 논리를 토론의 장에서 표출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진정한 사회의 발전은 이러한 합리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란과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한 믿으면서 남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어리석음은 이제 성숙된 사회적 교양으로 막아야 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관료, 시민단체, 학자, 언론인 모두 더 이상 기존의 ‘목소리 높이기’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아니면 말고’ 식의 선정주의가 무차별적으로 사회를 돌아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장이 이데올로기상으로 좌익이든 우익이든 아니면 진보든 보수이든지를 막론하고 제대로 된 근거와 논리 속에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는 풍토가 이롭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논리를 만들어 내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사악한 행위다. 모르고 행하는 것은 무지(無知)이지만 알고도 왜곡하는 것은 범죄(犯罪)가 될 수 있다.

학자 또는 전문가들이 논리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여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마치 다양한 상품이 나와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시장점유율을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 생산자들이 각자의 기획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대하고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이 만드는 여러 이론과 논리를 우리들이 쇼핑하고 소비하면서 보다 나은 민족화합과 궁극적으로 통일의 논리를 가꾸는 것이다. 단 하나의 논리가 모든 다른 것을 압도할 수는 없다. 경제에서 독점이 폐해를 만들 듯이 어느 한 논리의 편식과 의도된 강요는 다른 것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가 각자의 생활에 바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학자들이 이론으로 제공하고 우리는 그것을 골고루 소비하면 된다. 골고루 소비하다 보면 싫어하던 것도 좋아지게 되고 또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된다.

‘똑똑한 국민이 똑똑한 통일을 만든다’ 라고 말했다. 이런 저런 논리들을 듣다 보면 어느 것이 자신에게 맞는 건지 알게 되고 또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게 된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통일도 한다. 관심을 갖고 우리의 남북한문제와 그 논리들을 바라보면 자신이 가져 왔던 우리의 현실과 나아갈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 문

국방부

2005. 「2004 국방백서」

김근식 외

2004. 「통일·남북관계 사전」, 서울 : 통일교육원.

김성한

2003년 9월호 “신보수주의자들의 세계관과 전략,” 「통일한국」,

김순규

1988. 「신국제정치론」, 서울 : 박영사.

김우상

1999. 「신한국책략」, 서울 : 나남.

김재한

1995. 「게임이론과 남북한관계」, 서울 : 한울.

노엄 촘스키

2000. 「불량국가」, 서울 : 두레.

로버트 D. 블랙월 · 알버트 카너세일 (편), 김일수 · 이정우(옮김)

1997. 「미국의 행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서울 : 한울.

이정우

2004년 9월호 “한미연합군 작전계획과 북한의 불안함,” 「통일한국」,
“OP-5029 폐기추진에 얽힌 의문,” 「통일한국」,

임마뉴엘 윌러스타인 외, 정진역 편역

1985. 「세계체제론」, 서울 : 나남.

최수영

2005. “7·1 조치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통일연구원 2005 개원 기념 학술회의 ‘북한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2005. 4. 7) 발표문.

편집실

2004년 7월호 “장성급회담 합의내용과 해설,” 「통일한국」,

폴 케네디, 이일수 외 옮김

1989. 「강대국의 흥망」,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프랜시스 후쿠야마, 안진환 옮김

2005. 「강한 국가의 조건」, 서울 : 황금가지.

한국방송 프로듀서연합회 · 평화문제연구소(편)

1997. 「통일·북한 핸드북」,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 영문

Binmore, Ken

1992. *Fun and Games*, Lexington: Heath and Company.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1993. "The Origins of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in B. Grofman, (ed.).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Choi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Doyle, Michael W.

1983.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12.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The Theory of Hegemonic War," in Robert I. Rotberg & Theodore K. Rabb (eds.).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ofman, B. (ed.).

1993.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Choi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Gulick, Edward V.

1955. *Europe's Classical Balance of Power*, New York: Norton.

Hinich, Melvin J. & Michael C. Munger

1997. *Analytic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lsti, Ole R. & Randolph Siverson and Alexander L. George, (eds.).

1980. *Changes in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Westview Press.

Huth, Paul K.

1988.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IBRD,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Jervis, Robert

1989. "War and Misperception," in Rotberg, Robert I. & Theodore K. Rabb (eds.).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ugler, Jacek & A.F.K. Organski

1989. "The Power Transition: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valuation,"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Keohane, Robert

1980. "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Regimes, 1967-1977," in Holsti, Ole R. & Randolph Siverson and Alexander L. George, (eds.). *Changes in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Westview Press.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seph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Kuhn, Thomas

1961.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atos, I.

1978.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vol. 1,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squita, Bruce Bueno de.

1981. *The War Trap*,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9. "The Contribution of Expected-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 David Lalman

1992. *War and Reason*,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Midlarsky, Manus I. (ed.)

1989.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Modelski, George & Patrick Morgan

1985. "Understanding Global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9. & William R. Thompson. 1989. "Long Cycles and Global War," in Manus I. Midlarsky (ed.),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Morgenthau, Hans J.

1948 & 1973.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Knopf.

Morrow, James D.

1994. *Game Theory for Political Scientis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Organski, A.F.K.

1958. *World Politics*, New York: Knopf. & Jace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lano, J. C. & R. Olton,

1982. *International Relations Dictionary*, California: Abc-Clio.

Rosen, Steven J. & Walter S. Jones.

1977.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Inc.

Rotberg, Robert I. & Theodore K. Rabb (eds.).

1989.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now, Donald M.

1997. *Distant Thunder*, New York: M.E. Sharp.

Snyder, G. 1991. "Alliance, Balance, and Stabilit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Stoessinger, John G.

1985. *Why Nations Go to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Tsebelis, George.

1994. *Nested Gam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Viotti, Paul R. & Mark V. Kauppi. 1987.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i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16.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A.: Addison-Wesley.

■ 인터넷 웹사이트

<http://bdlm.cqpress.com>

<http://www.bok.or.kr>

<http://www.eugenesoftware.org>

<http://www.globalsecurity.org>

<http://www.iaea.org>

<http://www.ohmynews.com>

<http://www.unikorea.go.kr>

<http://www.usni.org>

통일교육총서 12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인쇄일 / 2005년 7월 25일

발행일 / 2005년 7월 30일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142-715 서울시 강북구 수유 6동 535-353

전화 02)901-7160~7 팩스 02)901-7088

편집 · 인쇄 / 통일정보신문 02)796-8347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